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5.4.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2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2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8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21

Ⅲ. 세부 추진계획 ····· 25

전략목표 Ⅰ ····· 26

전략목표 Ⅱ ····· 55

전략목표 Ⅲ ····· 110

전략목표 Ⅳ ····· 138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174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17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78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183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 192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미디어의 발전 기반 마련

○ 범부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참여하여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 기존 방송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KBS·한전 간 협의('23.7월~'24.6월) 지원 등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본격('24.7월) 시행하였습니다.

○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인당 연 71만원, 온라인 유료)를 전면 무료화('23.7월)하여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이용자 수는 34배 증가: '22년 14,937명 → '23년 229,089명→ '24년 505,000명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실시

○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24년 종편·보도PP(3개사) 재승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전국 시·도 광역시 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24년 기준 12개→ '27년까지 16개 개관목표)하고 미디어 나눔버스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배치·운영**하여 전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부산('05년), 광주('07년), 강원·대전·인천('14년), 서울('15년), 울산('16년), 경기('19년), 충북·세종('20년), 경남·대구('23년)

**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23년 483회→'24년 850회)

권역	차량 구분			합계
	대형	소형		
		라디오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수도권	경기	-	인천	**2대**
경상권	-	부산	울산	**2대**
호남권	-	-	광주	**1대**
중부권	대전	충북	-	**2대**
강원권	-	강원	-	**1대**

○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24년 목표 6.5% 대비 0.25% 초과달성)되었습니다.

* '22년 42만 명→'23년 43.3만 명→'24년 49.6만 명

○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편성*하여 안전한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학교 미디어교육 내 딥페이크 교육 의무실시(초·중·고 100개교 대상)

○ 생성형AI 활용, 딥페이크 역기능 증가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운영 및 강좌를 다양화*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미디어교육 보편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온라인 VOD 강좌 수 : '22년 180강 → '23년 236강 → '24년 250강

□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

○ 지역방송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20개사 40개 프로그램, 36억원)하여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등으로 지역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플랫폼에 대한 지역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여, 시청자 접점 확대 및 재정 안정성 강화('24년 판매실적 9.3억)에 기여하였습니다.

□ 재난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50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재난방송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여 재난방송 적극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재난방송주관방송사(KBS)가 재난정보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재난포털 ·유튜브 채널(세이프K) 운영, 재난CCTV 구축·연계(약 17,600대), 재난안전지도(GIS) 개발·운영,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작·공유 등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24년도 TV·라디오용 각 40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등 1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등 6개)와 공유하여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수어 재난방송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방송사는 노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4.6월)하였습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여 전국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주요방송사(10개사) 외에도 지역방송사(26개사) 방송시설까지 점검대상(36개사 153개)을 확대하여 방송재난을 예방하였습니다.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수신환경 실태조사('24년 5,380개소), 시설관리기관 대상 기술지원('24년 51개소), 라디오·DMB 중계설비 지원 확대('23년 20대→'24년 60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연구반 운영('24.6월~)을 통해 국내·외 규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출범('24.7.19.)하고, 바람직한 AI 이용자보호 정책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24.9월)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 국민편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14세 미만자의 아이핀 온라인 발급('24.10월) 및 재외국민 비대면 본인확인('24.11월)을 개시하였습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확대('24.2월) 등 분쟁조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설치·운영('22.5월~) 및 AI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24.12월) 등을 통해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미디어 사회 안전망 구축

○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 도박, 불법 사금융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불법·유해정보 삭제·차단: '22년 17.9만건 → '23년 18.8만건 → '24년 25.3만건

○ 신속한 삭제·차단*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先차단 後심의, 긴급심의 대상 확대 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24.11월)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차단 : '22년 5.5만건 → '23년 6.7만건 → '24년 9.4만건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24.6월),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24.9월)를 도입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4.11월)하였습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정밀 측위 앱 보급('23.9월)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급제단말·유심이동폰 이용자(약 219만명)의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24년 디지털윤리 교육 인원 >

구 분	유 아	청소년	성 인	교 원	합 계
교육인원 (명)	30,001	118,183	100,481	4,237	**252,902**

○ 디지털윤리 공모전('24.6월), 주간 캠페인('24.7월), 및 디지털윤리대전('24.12월) 등의 홍보를 통해 디지털 윤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정보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및 디지털 플랫폼 등 최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24년, 54,083명 대상)하였습니다.

○ 플랫폼 활성화 등 통신시장 변화 및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24.1~4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24년, 46개 서비스 대상)하였습니다.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방통위)'를 반영한 앱마켓 분야 지표 신설, 서비스 해지·탈퇴의 이용 편리성 정도에 따른 평가지표 세분화 등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위치정보법」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24년도 8회, 710여명)하여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이통사가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전국 163개 지점)을 측정·공개('24.3월)하여 이통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 위치정보사업자 등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실태점검(1,200여개사)을 통해 위치정보 오·남용 예방 및 개인위치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

○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자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4.12.26.)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통신4사 총 과징금 14.71억 원)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 이동통신 유통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불·편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정 및 시행('24.7.24.)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시장조사심의관 조직 신설('23.11월)을 계기로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플랫폼·통신·방송 분야별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생성형 AI 등 신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피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주요 국가별 플랫폼 규제 현황과 관련 조사 사례 등 국내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으로 발생하는 선택권 제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PC와 모바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VOD 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였습니다.

○ IPTV사업자의 단독상품 온라인가입 거부, 온라인가입 이용자 차별 등 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 대상으로, 타 사업자 서비스 전환 시에 기존 회선 해지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자가 이중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활력 제고

○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연계정보*(CI) 활용 국민편의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 법적 근거 마련('24.1월)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

□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방송사업자의 동일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제재 조치 받은 방송사가 동일 심의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2024 파리올림픽 중계방송의 과도한 중복중계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중계방송사(KBS·MBC·SBS) 의견수렴을 거쳐 각 방송사에 순차편성을 권고('24.7.2.)하였습니다.

< 2024 파리올림픽 중계 순차편성 권고문 >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제33회 파리 올림픽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을 가진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계방송을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2. 다만 개·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3. 중계방송권을 가진 방송사업자는 과도한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사 간 사전에 협의한다.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시청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의 특화 기능이 탑재된 맞춤형 TV를 전년대비 12,000대 증가한 32,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추이>

연도	연간 보급대수	누적 보급률
2022년도	239,798대	37%
2023년도	260,378대	40.2%
2024년도	292,378대	45.1%

※ 보급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수 : 648,113명

○ 59개 방송사업자*에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를 지원('24년 46억원)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고, 비실시간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방송사업자**를 지속 확대('23년 8개사→ '24년 10개사)하는 등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중앙 및 지역지상파, 종편, 보도PP) 47개사, 고시의무사업자(일반PP, SO) 12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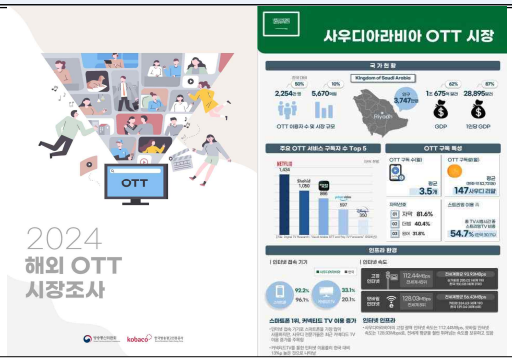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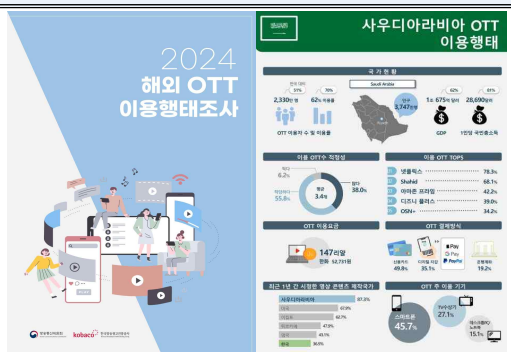
** ('23년) KBS, MBC, SBS, EBS, JTBC, TV조선, 채널A, MBN → ('24년) YTN, 연합뉴스 추가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비롯하여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인 '2024 국제 OTT 포럼('24.10.31.)'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우디·튀르키예·스페인·포르투갈 등 해외 주요 국가의 OTT 시장과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국내 OTT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2024 해외 OTT 조사 현황 >

구분	해외 OTT 시장조사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요약		
조사 내용	국가별 OTT 시장상황,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 해외사업자 규제, 해당 국가 미디어 관련 규정, 저작권, 세금, 개인정보 등	현지 이용자들의 OTT 이용행태 및 K-미디어 콘텐츠 선호도 조사 - OTT 시장규모, 유료 OTT 개수, K-콘텐츠 이용률·이용의향 등
조사 국가	사우디,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사우디, 말레이시아, 태국

○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방송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지역MBC 20→14%, 지역민방 3.2→2.6%)하였습니다.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물 편성의무 완화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5.2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2.(수) 배포시점 배포 2024. 5. 22.(수)

방통위,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부담 완화 추진

- 지역방송사 대상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22일(수)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SBS NEWS

정치

방통위, 지역방송 순수 외주 제작물 편성 비율 2년간 완화

전병남 기자

□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 혁신형 중소기업(총 64사)과 소상공인(총 257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동시에 지역경제와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례 >

모닝아트	이노바인코리아
	
멀티탭	단백질커피믹스

<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

지에스시스템	슈랜더
	
타이어	실내화

○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방송 법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방송분야 법·제도개선

○ 방송, OTT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성장 및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발전을 위한 원칙과 목표와 지상파 매체별 정책 방안 등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사 소유 대기업 기준 상향, 지상파 간·지상파-유료 방송 간 겸영 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분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위상과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와 공영방송이 공적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계약형태로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 약속 → 이행 점검 → 피드백'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 및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해 재허가·재승인시 부관 부과 사유를 공개하고, 지상파·종편·보도PP의 허가·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5년→7년)하겠습니다.

- 아울러, '24·'25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허가) KBS1DTV, MBCDTV 등 24개사 160개 방송국) / (재승인) JTBC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콘텐츠 투자 강화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영아기~노년기) 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눈높이에 맞는 실속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도서·산간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24년 실적 850회, '25년 목표 866회)하여 지역 격차 없이 전 국민이 다양한 미디어 교육·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

○ ▲지역소멸 프로그램 제작 가점 부여, ▲지역-해외방송사 간 공동 제작 인센티브 부여, ▲지역방송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대상 확대 등으로 지역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OTT 플랫폼 등 콘텐츠 유통기반을 확대하여 지역방송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50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확·신속한 재난방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36개사 153개 시설)을 실시하고, 주요 10개 방송사대상으로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등의 방송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 음영지역(도로·철도 터널 등)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 AI 확산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및 AI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및 법령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피해 구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콘퍼런스 개최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 강화 등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윤리 교육 및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홍보를 강화하고 실습형 메타버스 교육 확대 및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쇼핑·배달·모빌리티 등 이용사업자가 존재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이용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 위치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위치정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긴급구조기관, 통신사와 협업 확대 및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위치정보 품질측정결과 분석·공개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신규 진입 사업자와 다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광고 모니터링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이버안심존 앱의 서비스 편리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고 청소년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iOS 자녀용 앱 개발 및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 안드로이드 '사이버안심존' 부모용 앱('24.7월), 자녀용 앱('24.10월), iOS '사이버안심존(통합)-부모용' 앱 출시('24.11월))

○ 전 국민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통신분쟁 조정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2명)을 위촉하고, 분쟁조정신청 매뉴얼·사례집 등을 이용자에 제공하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겠습니다.

○ AI 기술 및 디지털폭력 등 온라인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

○ 방송통신 분야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보완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신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용자의 피해·불편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인터넷플랫폼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현황,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도출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 집합건물 입주자의 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선택권 제한 관련 세부 기준(고시) 제정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신규 단말기 출시 시 이용자의 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선탑재 앱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쇼핑·배달·교육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에 의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금지행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제도개선 등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료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여부 점검·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침체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평가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하여 방송의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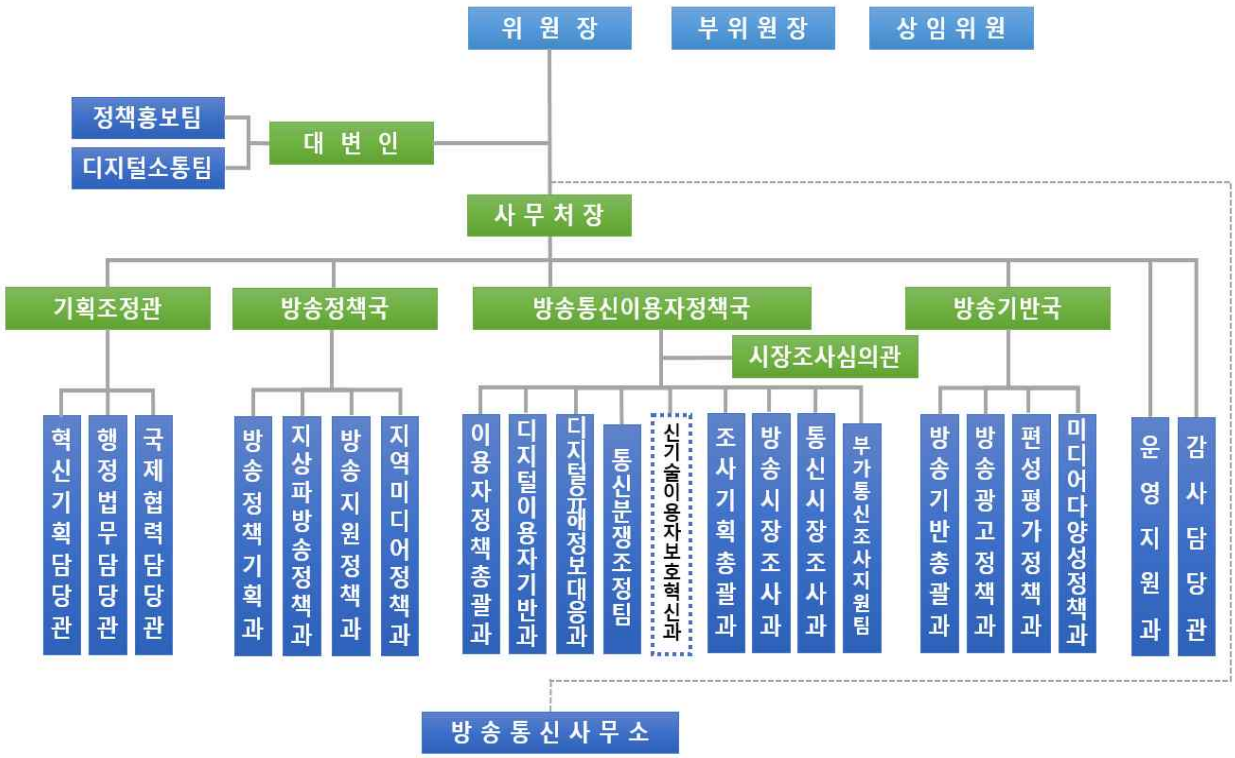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 조직 : 1처 3국 3관 19과(담당관) 4팀[총액] / 1소속기관



(2) 인원(정원) : 283명(본부 239명, 소속기관 44명)

구 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5	7	6	14	19	76	112	239
소속기관	-	-	-	1	-	5	38	44
계	5	7	6	15	19	81	150	283

(3) 재정현황(혁신_재정)

(단위 : 억원)

구 분	'24	'25	'26	'27	'28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2,484.9	2,422.7	3,360.9	3,435.6	3,362.1
(전년대비증가율, %)		△2.5	38.7	2.2	△2.1
ㅇ 총계	2,484.9	2,422.7	3,360.9	3,435.6	3,362.1
(전년대비증가율, %)		△2.5	38.7	2.2	△2.1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44.9	254.1	271.9	290.9	311.3
(전년대비증가율, %)		3.8	7.0	7.0	7.0
ㅇ 기본경비	42.8	35.6	50.0	51.5	53.0
(전년대비증가율, %)		△16.8	40.3	3.0	3.0
ㅇ 주요사업비	2,197.2	2,133.0	3,039.1	3,093.2	2,997.9
(전년대비증가율, %)		△2.9	6.0	35.9	△0.0
□ 예산					
ㅇ (총)지출	480.1	487.4	875.8	830.2	769.7
(전년대비증가율, %)		1.5	79.7	△5.2	△7.3
ㅇ 총계	480.1	487.4	875.8	830.2	769.7
(전년대비증가율, %)		1.5	79.7	△5.2	△7.3
【일반회계】					
ㅇ (총)지출	480.1	487.4	875.8	830.2	769.7
(전년대비증가율, %)		1.5	79.7	△5.2	△7.3
ㅇ 총계	480.1	487.4	875.8	830.2	769.7
(전년대비증가율, %)		1.5	79.7	△5.2	△7.3
□ 기금					
ㅇ (총)지출	2,004.8	1,935.3	2,485.1	2,605.4	2,592.5
(전년대비증가율, %)		△3.5	28.4	4.8	△0.5
ㅇ 총계	2,004.8	1,935.3	2,485.1	2,605.4	2,592.5
(전년대비증가율, %)		△3.5	28.4	4.8	△0.5
【방송통신발전기금】					
ㅇ (총)지출	2,004.8	1,935.3	2,485.1	2,605.4	2,592.5
(전년대비증가율, %)		△3.5	28.4	4.8	△0.5
ㅇ 총계	2,004.8	1,935.3	2,485.1	2,605.4	2,592.5
(전년대비증가율, %)		△3.5	28.4	4.8	△0.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공영방송 등 방송의 공적역할 제고 및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 국민(정보취약계층, 학생, 학부모 등) 대상 디지털윤리교육 및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 강화 등 대응체계 정비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방송통신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기술발전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다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온라인상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 강화

○ 방송언어 순화 자막고지, 방송대상 시상식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등 건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 국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성규제 개선, 방송평가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안 마련 등 추진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전략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성과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관리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관리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성과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관리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관리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관리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관리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전략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성과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관리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관리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관리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성과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관리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관리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성과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관리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관리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관리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관리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전략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성과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관리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관리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성과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관리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관리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전략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성과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관리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관리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관리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관리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관리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성과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리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관리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관리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3	9	11	27	48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6-1, 국정27-2, 업무1-3, 업무2-2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국정27-2, 업무1-3, 업무2-2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국정 6-1, 국정 6-2, 국정 6-3, 국정27-1, 국정 27-2, 업무1-3, 업무2-1, 업무2-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59-1, 국정59-2, 업무3-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27-6, 업무1-3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59-2, 업무1-3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국정 59-3, 국정 59-4, 업무3-2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국정 59-4, 업무3-1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1-1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국정59-4, 국정59-5, 업무2-1, 업무2-3, 업무3-2, 업무3-3,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59-3,국정59-5, 국정64-3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업무 3-2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업무 3-1, 업무 3-2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국정 59-4, 업무 3-1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업무 3-1, 업무 3-2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국정27-1, 업무1-3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59-2, 업무3-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6-1, 국정6-4, 국정27-2, 국정27-3, 업무1-3, 업무2-2, 업무2-3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국정27-2, 업무2-2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전략목표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OTT 성장 및 지상파방송 위상 약화 등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디어 법·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 수요 증대

o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미디어 이용역량 격차 증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필요

o 지역여론 형성 등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지역·중소방송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수익기반 확대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필요

o 재난의 국지화 및 일상화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과 방송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그간의 성과

o 범부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참여하여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o ‘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KBS·한전 간 협의(’23.7월~’24.6월) 지원 등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본격 시행(’24.7월)

o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전면 무료화(’23.7월~) 이후, ‘24년 기준 4,300억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o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24년 종편·보도PP(3개사) 재승인 실시

o 전국 시·도 광역시 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24년 12개→’27년까지 16개 개관목표)하고 미디어 나눔버스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배치·운영

o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 제작시설·장비 무료 활용 지원

o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등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시·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 상승

o 재난방송 의무사업자(50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재난방송 실시 지원

o 터널·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수신환경 실태조사,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중계설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중점 추진내용**

o '24·'25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사전동의 심사 등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재허가) KBS1DTV, MBCDTV 등 24개사 160개 방송국) / (재승인) JTBC 등
** 재허가·재승인 시 부관 부과 사유 공개 및 최대 유효기간 확대 등

o 방송,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성장 및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마련 추진

o 공영방송 협약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 분야에 투자 활성화를 유도

o 생애주기별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에 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확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도 확대('24년 실적 850회, '25년 목표 866회)

o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등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기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o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방송재난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o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품격 높은 대국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①방송사업자의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종편·보도PP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②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②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개)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②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전략목표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방송·통신 환경 대응방안 마련

○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 및 글로벌 미디어 경쟁 가속화 상황 등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 미디어 법제 및 차세대 방송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등 추진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지원

○ 국내 방송이 국내 시청자에 품격높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연의 책무 수행을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제도를 운영 및 공영방송·지역방송·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23	12	4	6	12	12	'29년 목표치는 최근 5년('20~'24년) 실적치의 평균(11.4)을 고려하여 설정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Ⅰ-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등 이행 점검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99.4	95.3 (지상파 97.7+ 종편 92.9)/2	99.4 (지상파 98.8+ 종편 100)/2	96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현황에 대한 엄격한 점검 결과 '21~'24년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다만, 직전 재허가·재승인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95%)보다 상향된 목표치 설정(96%)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수)×0.5]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사 등의 장기연임 해소 방안 마련 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사업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건수 연 5건이하 유지(선거별 2건), 전문 외부기관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등	실적 점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OTT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변화로 미디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상파, 종편·보도PP의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져 공적책임 훼손 우려

- 엄격하고, 공정·투명한 재허가·재승인을 실시하되,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심사평가 기준, 심사절차 효율화 등의 필요성 증대

- 이전 재허가·재승인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한 조건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성 제고

□ 갈등요인

○ 엄격한 재허가 절차(신청서류 등 포함) 및 조건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OTT와 같은 디지털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국회·시민단체·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 뚜렷한 입장차이로,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방송 산업 활성화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조건 부과 원칙, 사유 등을 공개하여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방송사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현안 관련 조건을 부과 및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진행

○ 종편PP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사업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소통 절차를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Ⅰ-1-①)

□ 추진배경

○ 미디어 매체가 다변화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 증대를 반영한 재허가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 추진

- 재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23~'26년 재허가 심사 사전 기본계획 수립('22.9월)

- '23~'26년 재허가 심사 사전 기본계획을 반영한 '24·'25년 재허가 세부계획 수립, 현장점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24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재허가 실시

- 또한, 기존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이행점검 실시

* 주요 조건 :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비정규직 현황 제출, 협찬고지 관련, 경영의 독립성·투명성 제고, UHD 편성실적, 외주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허가 실시)** '23~'26년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을 반영한 '25년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 이를 기반으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4개 방송사, 160개 방송국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재허가 추진

- 단순 재허가 신청서 검토·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제고

-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위하여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향후 철저한 이행점검 추진

○ **(조건 이행점검)** ‘20~’2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과한 재허가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유도하고,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추진근거 :「방송법」 제9조(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및 제99조(시정명령 등)

- 이행점검 결과 조건 미이행, 미흡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차기 재허가 심사 및 조건 부과 시 반영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접수	‘25.4~6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의결	‘25.6월	
2/4분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사업자 설명회 개최	‘25.6월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 접수	‘25.6월	
3/4분기	지상파 재허가 관련 현장점검 실시	‘25.9월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25.7~10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5.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의·의결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애로사항 등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재허가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부계획 설명회 개최	‘25.6월
현장방문	재허가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	‘25.7~9월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승인 심사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98.6	98.8	98.8	98.9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0.5]+[(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실적자료

2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Ⅰ-1-②)

□ 추진배경

○ **(종편·보도PP)**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추진

* 종편·보도PP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시 방통위의 재승인을 받아야 함(방송법 제17조)

○ **(공익채널)**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2년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인)정

※ 종합유선방송,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장애인복지채널과 공익채널 각 분야별 1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함(방송법 제70조)

○ **(사전동의)**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SO, RO, 위성) 재허가 사전동의 요구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공책임·공정성 등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통보,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편·보도PP)**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PP(JTBC)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관련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양극화 해소 노력 반영

- 방송 공정성 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및 외주사와 상생협력 등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점검

-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

○ **(공익채널)** '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 제도건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 신청, 심사 등 제도개선(안) 마련

○ **(사전동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유료방송사업자(SO·RO·위성)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와 위원회 의결 추진

*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심사(9인)·약식심사(3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심사대상 사업자) 이행실적 접수	'25.1월	
	'25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 심사위원회 운영	'25.2월	
	'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위원회 의결	'25.2월	
	'23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5.3월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의결	'25.3월	
2/4분기	종편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25.5월	
	공익채널 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추진	'25.5월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의결	'25.5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5.5~9월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25.6~7월	
3/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5.5~9월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의결	'25.7월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8~9월	
4/4분기	'25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5.10월	
	'2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25.11월	
	'25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의결	'25.11월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위원회 의결	'25.11월~12월	
	위성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의결	'25.12월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관련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및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 심사위 운영,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심사위원회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 운영	’25.2월
심사위원회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25.3월,5월
현장방문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 등	’25.5~9월
현장방문	공익채널 선정사업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	’25.6~7월
현장방문	종편PP 재승인 관련 현장 실사(심사대상 사업자)	’25.7월
심사위원회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25.7월
의견수렴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8~9월
심사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25.10월
심사위원회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	’25.12월

□ 기대효과

○ **(종편·보도PP)**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25년 재승인 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제고 유도

○ **(공익채널)**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고려, 국민정서 함양,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에 기여

○ **(사전동의)**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유료방송사에 대해 공적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실효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303)	일반회계	2.34	2.37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1.87	1.90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0.47	0.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 책무 제고율(%)	100	96.7	50	98.4	실적이 부진했던 '24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22년·'23년 실적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 ① + ② + ③ + ④ > 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조건 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건수 × 0.5) ② 공익채널 선정 추진율 (공익채널 심사위 운영 × 0.05) + (공익채널 선정 의결 × 0.05) ③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 [(유료방송 (재)허가·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건수/사전동의 대상 사업자)×0.2] ④ 제도 개선 추진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 0.1)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1)	실적자료

성과목표 Ⅰ-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OTT 성장 및 기존 방송매체 성장 정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미디어산업 진흥 및 시청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방송 전반의 제도 개선 추진

- ▲통합 미디어 법제 ▲공영방송 협약제 도입 ·수신료 제도 개선 ▲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 방안 마련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전국민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재난방송 등 공적 역할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생애주기별특성에 기반하여 단계별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을 반영한 설계표 등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확대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 기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지속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재난 예방 적극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100	100	100	100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와 재난방송 수신지원 관련 과제 목표달성 결과 측정	< ① + ② >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만족도 × 0.5 ※ 7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81.0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달성도 × 0.5 ※ '25년 목표 : 51개	개별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o 방송·통신 산업과 기술의 역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00년 전후 수립된 현행 미디어 법 체계 관련 변화 반영이 지체

- 지상파방송의 위기, 특히 지역·중소방송과 지상파 DMB, UHD 등의 효율적 투자 등을 위한 지원 및 조정 요구가 지속 제기

o 미디어융합에 따른 매체간 경쟁 심화 환경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지역·중소방송을 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수익 기반 확대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지역방송 매출 규모는 연평균 10.7% 감소(광고매출 21.1% 감소, ’23년도 재산상황공표집)

o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22년 42만명→’23년 43.3만명→‘24년 49.6만명)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 국민 수요가 지속 증가

o 재난의 국지화·일상화, 재난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요구 증대

- 전국 터널·지하공간의 FM·DMB 수신불량률의 높은 수준(’24년 60~70%)으로, 대다수 시설관리기관은 기술적 역량이 부재하여 해당 터널의 재난방송 불량 원인 파악 등이 어려운 상황

□ 갈등요인

o 현행 미디어 법 체계의 재편은 방송사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 따라 전문가, 방송사, 시청자, 부처 등에 다양한 이견 존재

○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1개 센터를 목표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축지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의 예산확보 문제 및 일정 지연 등이 발생, 차질없는 센터 구축 및 개관**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물 건립, (방통위) 방송 시설·장비 구축

** (경북, 전남, 전북, 충남지역) '26~'27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 구축중

○ 전국 터널·지하공간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기관의 관심 및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에 어려움 존재

□ 갈등관리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공영방송 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 등에 협조를 적극 요청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위해 센터를 건립 중인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

○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신 불량으로 확인된 터널의 시설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신청을 받아 수신불량 원인 및 중계설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를 통보하여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유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Ⅰ-2-①)

□ 추진배경 (목적)

○ OTT 등 신유형 미디어 성장으로 미디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구 미디어 동반성장, 국내 미디어 산업 진흥 및 시청자 보호 강화 필요

○ 경쟁적 방송·통신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수신료 등 공적재원을 투명하게 징수·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지상파 등 기존 방송 미디어의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투자 유입을 위한 소유·겸영 규제 등 개선 요구 제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방송,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성장, 동일 서비스-동일규제의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 **(공영방송 평가 및 재원제도 개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적재원인 수신료의 투명한 징수·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유·겸영규제 개선)**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 기준, 지상파방송 간, 지상파방송-유료방송 간 겸영규제 개선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차세대 미디어 전략 정책연구과제 추진	'25.6월	
	통합미디어법 관련 정책연구과제 추진	'25.6월	
3/4분기	소유·겸영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25.9월	
4/4분기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12월	
	소유·겸영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25.12월	
	통합미디어법(안) 마련 추진	'25.12월	
연중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연중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 지원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미디어법제 정비)** OTT 등 신유형 방송서비스 관계 부처와 통합 미디어 법제 관련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 **(공영방송 평가 및 재원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를 포함한 의견 수렴 추진

○ **(소유·겸영규제 개선)** 소유·겸영 규제 개선사항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협약제도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유관 사업자 의견 수렴	'25.5~6월
	통합 미디어 법제 관련 의견수렴 진행	'25.6~9월
	소유·겸영규제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유관 사업자 의견 수렴	'25.8~9월

□ 기대효과

○ **(미디어법제 정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법제개선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 진흥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공영방송 평가 및 재원제도 개선)**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수신료 징수.사용의 투명성을 증진하여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대

○ **(소유·겸영규제 개선)** 대기업 기준 상향 및 겸영규제 완화로 방송사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산업 재원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협약제도 도입, 수신료 제도개선,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나 목표치를 100%로 적극 설정	< ①+②+③ > ① 공영방송 제도개선 추진율(0.4) - (협약제도 도입 추진×0.25)+(수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0.25) ② 소유·겸영규제 개선 추진율(0.4) - (소유·겸영규제 관련 개정안 마련 ×0.25)+(소유·겸영 규제 개정 절차 준수율×0.25) ③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추진율(0.2) - (정책연구 실시 × 0.3) + (의견수렴 진행 × 0.3)+(법안 마련 × 0.4)]	

2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Ⅰ-2-②)

□ 추진배경 (목적)

○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생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o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국정 59-1)
o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59-2)
o 전 국민 미디어교육 제공 확대(업무 3-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활용 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습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배움의 현장 방문 등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 디지털 기술 고도화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도 빠짐없이 특성에 맞는 미디어 교육 제공

구분	주요내용
유아	·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 미디어 이용 규칙 만들기 등 놀이형 미디어교육 제공
청소년	· 미디어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해 학교 교과 및 동아리(초중고), 자유학기제(中), 고교학점제(高), 대학 등과 연계교육 제공
청장년	·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등 미디어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연계교육 제공(지역 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
노인	· 65세 이상 노인, 퇴직자 등에 디지털기기(키오스크 등) 활용 교육
장애인	· 발달장애인·특수학교 학생 등에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 교육
다문화	·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 한국사회 적응 위한 미디어교육
학교 밖 청소년	· 학업중단 및 자퇴 청소년 등 자아 존중감 회복, 브이로그 제작 교육
저소득층	·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우리동네 영상제작 및 상영회 개최
도서산간 지역민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한 미디어 체험 및 섬마을 미디어캠프 등

○ **(미디어 인프라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시설·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 미디어교육 정보 및 강좌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운영

구분	주요내용
미디어 나눔버스	·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산간 지역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8대) 운영 확대(866회 목표)
미디어교육 통합플랫폼	· 교육자료 제공 및 온라인 학습관리 등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플랫폼 운영

○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강사 양성·연수,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등 미디어 교육의 전문성 강화 추진

구분	주요내용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 센터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수강 전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차이를 분석
강사 양성·연수	· 미디어교육 신규 강사 양성 과정을 위한 자격검정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운영
미디어교육 연구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행
미디어교육 전문지 발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최신 동향, 교육 우수사례 등을 담은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발간

○ **(미디어교육 참여행사)**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된 주제로 다양한 축제, 페스티벌 등 지역민 중심의 소통·참여 행사 개최

구분	주요내용
장애인 미디어 축제 (부산)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전시회·특강·체험 등 미디어 축제 개최('25.5월 예정)
청소년 미디어제작경진대회 (대전)	· 청소년 미디어 저널리즘 교육체험 확대를 위한 공모전·토론회·특강 등 미디어 제작경진대회 개최 ('25.8월 예정)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미디어교육 분야 교·강사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 미디어교육 개시	'25.1월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개시	'25.3월	
2/4분기	미디어교육 연구용역 기관 공모 및 선정	'25.4월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25.5월	
3/4분기	청소년 미디어 제작경진대회 개최	'25.8월	
	청소년 미디어교육 2학기 운영	'25.9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5.10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25.10월~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청소년, 미디어교육 교사강사 등 미디어교육 참여자의 현장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행사	장애인 미디어 축제	'25.5월
	청소년 미디어 제작경진대회	'25.8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25.10월

□ 기대효과

○ 전 국민에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 제공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여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2」			
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3」		231	237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217	224
-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51	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2.8	93.0	80.1	81	'24년 실적치(80.1점)에서 과거 3개년도 이용자 만족도 평균 증가율(0.2점) 보다 0.7점을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24년부터 지표 측정 조사 전반 재설계로 최초 목표치 신규 설정	7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E-mail, 전화 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신규	6.18	6.75	7	'24년 목표치(6.5%) 대비 약 8%(0.5%) 상향된 목표치 설정	{(교육 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100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 (온라인)

3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Ⅰ-2-③)

□ 추진배경

○ 지역방송은 지역 공론의 장으로 지방자치 실현, 지역성·다양성 구현, 재난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OTT의 확산 등 미디어 시청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밀착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지역성 강화

- 지역 밀착형, 경쟁력 강화, 신유형 콘텐츠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역-해외방송사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 **(유통체계 강화)** 국내·외 콘텐츠 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신규수익원 발굴 등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우수 콘텐츠 재제작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역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재직자 교육 지원)**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응력 향상 및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지역방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방송사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지역 상생)**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 유관기관 협업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과 지역이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지원작 선정	'25.2~3월	
	상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5.3~6월	
2/4분기	상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5.4~6월	
	피칭포럼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	'25.5월	
	상반기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25.6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25.7~8월	
	하반기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5.7~12월	
	국내 피칭포럼 참가 지원	'25.9월	
	하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25.9~12월	
4/4분기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	'25.11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25.12월	
	하반기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중소방송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관련 추진방향, 교육과정 수요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사업 설명회)** 제작지원 분야 및 세부내용, 회계 정산 규정, 해외유통·마케팅 전략 등 세부내용 안내, 의견수렴 실시

○ **(지역방송 활성화 간담회)** 지역방송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정책과제 설명 및 지역방송 지원,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방송 발전 방안 논의

○ **(제작지원 프로그램 현장점검)** 제작지원 선정 프로그램별 방송사 현장 방문을 통해 제작진행 경과 점검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외 방송사 공동제작, 유통 협력 등 파트너십 강화 및 교류협력 방안 의견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관계자 의견수렴	지역·중소방송사 사업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교육과정 수요 등 의견수렴	'25.1월, 수시
사업 설명회	제작지원 분야 및 세부내용, 회계 정산 규정, 해외유통·마케팅 전략 등 사업 관련 담당자 대상 세부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25.2월
현장점검	제작지원 선정 프로그램별 방송사 현장방문을 통한 제작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25.7~8월
교류협력행사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를 통한 국내·외 방송사 공동제작, 유통 협력 등 파트너십 강화 및 의견 청취	'25.11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민 소통 강화, 공익·공공성 강화 등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45.3	44.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87.4	87.7	87.8	88.0	전년도 만족도 결과를 감안하되 만족도 결과의 한계치를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 설정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개)	185	208	231	231	'25년 예산 감액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24년과 동일하게 설정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측정	사업결과보고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Ⅰ-2-④)

□ 추진배경

○ 재난 및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정보 전달방식을 고도화하여 정확·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 강화 필요

○ 최근 노후화된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 전력 설비 이상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방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방송시설 안정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50개사)의 재난방송 상황을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시스템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방송되도록 연락(전화·문자) 조치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25년도 TV·라디오용 각 40편)하여 상·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수어 재난방송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방송사는 노력하도록 하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지원

○ 전국 터널·지하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방송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 등 재난방송 실시 기준 개선 방안 마련

○ 방송중단 등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전국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25년 36개사 153개 시설) 실시,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10개사 대상으로 방송 송출 이중화, 방송재난 사후관리 등 내용을 포함한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재난 예방 적극 추진

○ 전국 도로·철도 터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실시('25년 약5,400개소), 수신환경 불량인 터널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지원('25년 51개소),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설비 설치지원('25년 17대) 등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도로·철도 터널 등 음영지역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수신환경 개선 방안 마련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25.2~3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25.3월	
2/4분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	'25.4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25.4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연구반 킥오프	'25.4월	
	재난방송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연구반 킥오프	'25.4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25.5~6월	
3/4분기	'26년 방송사업자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	'25.9월	
4/4분기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 보고	'25.10월	
	재난방송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11월	
	'26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25.11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25.11~12월	
	'25년 주요방송사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25.12월	
	재난방송 수신환경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12월	
	'25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기술 컨설팅 완료	'25.12월	
연중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실시(KBS)	연중	
	재난재해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공유	연중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상설 협의	연중	
	24시간 재난방송 실시간 모니터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난방송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시 재난방송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행안부 등)·방통위·방송사 간 협력

○ **(방송시설 현장점검)** 주요 방송사 재난방송 대응체계, 계절별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송시설 안전상태·비상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정책연구반 운영)**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및 재난방송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난방송 실시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전달하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공유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및 그 외 방송사가 노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수어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재난 취약 계층의 재난 정보 접근권 보장

○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DMB 수신 환경 개선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수신률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방송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점검 등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평상시 및 재난 상황 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2.56	8.41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12.56	8.41
-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2.0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6	0.36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0.00	5.8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Ⅰ-1-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기금	27.38	26.86
▪ 재난방송 운영지원(307)		27.38	26.86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21.19	21.19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0.52	-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5.67	5.6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	신규	100	100	재난유형별 예방정보와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취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콘텐츠를 제작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기 위해 설정	(제작편수/제작목표편수)×100 - 25년 목표 : 40편	내부자료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100	100	100	95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협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25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104개소)]×100	내부자료

전략목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상 피해 관련 정책이 소관에 따라 흩어져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피해구제 지원 필요

○ 인공지능서비스가 사회 全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디지털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필요

○ 불법스팸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필요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급속히 유포·확산되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적 공동체 운영을 위협

○ 단말기 유통법 폐지('25.7월 시행 예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장 혼란 및 이용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온라인에서 기사 등 콘텐츠를 가리고 삭제를 제한하는 플로팅 광고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

○ 인터넷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필요

○ 방송시장 정체, OTT 활성화 등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불공정,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

◇ 그간의 성과

○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ISP-CP간 망 이용계약 실태점검 및 개선점 도출('24.5~12월)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

○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포털뉴스 민관협의체 개최(12월), 네이버 현장방문(9월), 포털뉴스 세미나 개최(12월) 등

○ 비상임위원 6인을 추가 위촉('24.2월)하고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실시('24.1월~)하는 등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분쟁조정('23년 1,259건 → '24년 1,533건) 및 조정상담('23년 8,072건 → '24년 9,038건)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24년 기준 3,856건(12월기준), 총 누적 6,307건, '24년 대비 110% 증가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연구반 운영을 통해 국내·외 규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법·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24.6월~)

○ AI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24.7월) 및 컨퍼런스 개최('24.9월) 등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 국민편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14세 미만자 아이핀 온라인 발급('24.10월), 재외국민 비대면 본인확인('24.11월) 개시

○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24.6월),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24.9월)를 도입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4.11월)

○ AI 윤리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 신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실시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와 서비스별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24.1~4월)

○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및 디지털서비스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24년, 54,083명)

○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P2P)'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협의회 개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사업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확산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고 팩트체크 교육·홍보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기반 강화

○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통해 일반인 및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팩트체크 교육·홍보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기반 강화

○ 적극적인 국회 입법 논의 지원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2.26.)

○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광고, 유통점 사전승낙서 미게시 영업 등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점검을 통한 시정조치·제도개선 수행

○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 개선

○ 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금지행위 위반 스트리밍 플랫폼사 시정조치

○ 유료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자 시정조치

○ IPTV사업자의 단독상품 온라인가입 거부, 온라인가입 이용자 차별 등 IPTV법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23.11월~'24.4월)

◇ **중점 추진내용**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운영,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등 추진

○ AI기술·디지털폭력 등 온라인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운영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법 제·개정, 자율규제 마련 등을 통해 AI의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추진

○ 전 국민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입점업체·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연구반 계속 운영을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추진

○ 디지털성범죄물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적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시장 경쟁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 실생활에 밀접한 유·무선·결합 방송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 점검·조사

○ 인터넷 불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 행정지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앱 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정책, 운영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점검 및 정책 개선 사항 발굴

○ 급격한 디지털 플랫폼 성장으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9	1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건)
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점)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①디지털서비스 정책개선 건수(건)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①통신분쟁 해결률(%)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①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조성한다.		①정보판별 교육 활성화 (점)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①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②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③디지털 윤리교육 만족도(점) ④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②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성능평가 수행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①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①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①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지수(점)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①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①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점) ②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전략목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신규 ICT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 정책

○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모색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불편해소

○ 통신서비스 관련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신분쟁 해결률 제고

○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원화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증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법률·자율규제 마련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고·검증하기 위한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정보취약 계층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평가대상 서비스별 특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신고 처리, 정책적·기술적 조치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 강화 등 대응체계 운영

○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특성과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사이버안심존 앱의 서비스 편리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 진행 및 청소년 이용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iOS 자녀용 앱 개발,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추진

○ 민간 자율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정보 판별 교육 및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 실시

○ 정보판별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모임 진행,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발간을 통한 국내외 허위조작정보 현황 및 정책 흐름 공유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조성

○ 유·무선·결합상품 분야별로 통신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조사를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을 조성

○ 방송통신 분야 사후규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 형평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플랫폼·기간·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

○ 앱 마켓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 발굴

○ 인터넷플랫폼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현황,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도출 등 체계적인 규제체계 마련

□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 이용자 실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앱 선탑재 등 통신 분야의 이용자 불편을 점검·개선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

○ 플랫폼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조사하고, 쇼핑·배달·교육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유발 행위 집중 점검

○ 모바일 앱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

○ 유료방송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방송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방송채널 차단 행위, 가입자 간 차별행위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점검·조사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6	10	8	10	4	8	과거 실적 및 추세와 단통법 폐지 등을 감안하여 '29년에 8건을 목표로 설정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 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자 간 갈등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전가 예방

○ 포털-언론사 간 뉴스제휴 심사평가 신뢰성 제고 및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강화

○ 통신서비스 불편·피해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운영,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통신분쟁조정제도 강화

○ AI기술·디지털폭력 등 온라인 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운영 추진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 AI 확산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AI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AI 이용자 보호 법·제도 등 규범 마련 추진

○ 생성형 AI 위험요소 신고·검증을 통해 이용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AI 피해 구제 체계 확립

○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각 계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콘퍼런스 등 정책네트워크 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점)[건수+만족도]	-	-	3.0	3.05	사업 효과성의 다방면 평가를 위해 피해상담 건수와 상담 만족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산출하여 모두 반영되도록 성과지표를 변경, '24년 실적을 감안하여 '25년도 실적을 0.05점 상향하여 목표로 설정	*전년목표 대비 10% 상향 피해상담 건수 기준, 당해 실적 5점 척도 산출점수 x 60% + 상담 만족도 5점 척도 산출점수 x 40%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건수 및 상담 만족도 (온라인피해상담지원시스템 통계 www.helpos.kr)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AI 등 신규 통신서비스 등장 및 기존 서비스의 다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취약계층을 포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와 분쟁이 크게 증가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상임위원 5명 포함 최대 30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3.1월)됨에 따라, 상임위원을 위촉·운영하여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

○ 온라인상 피해 관련 제도·정책이 소관에 따라 흩어져 있고 사각지대도 존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피해지원 필요

- 365센터 법적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 통과를 지원하여 365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 기반 마련

○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법적 쟁점 등이 복잡하게 발생

- 특히, 일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 오류나 기술적 특성으로 왜곡된 정보 생성, 편향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갈등요인

○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정책 수립 시 사업자 저항 및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우려도 존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Ⅱ-1-①)

□ 추진배경 (목적)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민간 자율규제 활동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

○ 포털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면서도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재부·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민간의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계약·대가의 의무화 필요성 검토 및 입법방향 구체화 검토

○ 추천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문제점 개선 및 포털뉴스서비스 제공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공정한 망 이용환경 개선방안 논의 개시	'25.4월	
	포털·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 정책연구반 구성·운영	'25.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기부 협의	'25.6월	
	포털·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5.6월	
3/4분기	포털·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 관련 입법 추진	'25.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25.9월	
4/4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25.12월	
	실태조사 등 공정한 망 이용환경 관련 개선안 마련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정한 망 이용계약·대가의 의무화 필요성 검토 및 입법방향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공정한 망 이용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4~12월

□ 기대효과

○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및 사업자 간의 갈등 예방·해소, 최종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우려를 사전에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00)		(213.32)	(201.64)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기금	8.3	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디지털서비스 정책개선 건수(건)	3	3	3	3	디지털서비스 정책개선 건수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법령(안)마련,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정책개선연구반 운영 등

2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Ⅱ-1-②)

□ 추진배경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11.)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시행('19.6.12.)

- 전기통신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으며 일상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개개인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 분쟁조정신청건수 : '23년 1,259건 → '24년 1,533건(↑21.7%)

○ 온라인상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 운영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급증하는 분쟁조정 신청건수에 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이 부족하여 법정기한 내 분쟁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을 위촉·운영하는 등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제고

-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및 소위원회 구성, 통신품질분쟁 현장측정 실시 등

○ 고령층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분쟁 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추진

- '24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배포, 통신분쟁조정신청 매뉴얼 마련, 통신사업자 현장간담회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 개최 등

○ AI 기술·디지털폭력 등 온라인상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피해지원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운영

- 센터 설립근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디지털폭력피해 관련 365센터 기능 확대, 피해유형별 피해지원방안 정책연구 등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강화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해결 지원

- 빈발사례 '주의경보' 발령 및 대국민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상담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 지원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25.1월	
	'24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 발표	'25.2월	
	'24년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발표	'25.2월	
	인공지능신고창구 신고접수사례 연계방안 협의	'25.3월	
	디지털폭력 관련 365센터 피해지원 방안 협의	'25.3월	
	'24년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25.3월	
2/4분기	'24년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25.4월	
	365센터 홍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25.4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5.4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25.5월	
	온라인서비스 대국민 피해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5.5월	
	상담유형별 피해지원 방안 및 데이터 활용방안 등 논의	'25.6월	
	통신품질 현장측정 실시	'25.6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추진	'25.6월	
3/4분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	'25.7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25.8월	
	온라인서비스 대국민 피해 예방 교육 추진	'25.7월	
	상담유형별 피해지원 방안 및 데이터 활용방안 등 논의	'25.7월	
	(현장소통) 통신사업자 현장간담회 개최	'25.9월	
4/4분기	통신분쟁조정신청 매뉴얼 마련	'25.10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	‘25.11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5.11월	
	통신품질 현장측정 실시	‘25.12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완료	‘25.12월	
	상담유형별 피해지원 방안 및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통신사업자 현장 간담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 개최 등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통신사업자 현장간담회 개최	’25.3분기
세미나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	’25.4분기

□ 기대효과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운영 등을 통해 급속시 증가하고 있는 통신분쟁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사례집, 분쟁조정처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 강화

○ 온라인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3200)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일반회계	5.62	5.64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319)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	방송통신 발전기금	11.48	9.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통신분쟁조정 해결률(당해연도, %)	72.9	82.1	82.9	79.3	최근 3개년도 '당해연도 해결률'은 ('22년) 72.9%, ('23년) 82.1%, ('24년) 82.9%로, 2025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3개년도 실적치의 평균값인 79.3%로 설정	[해결건수(조정전 합의+조정안수락 +신청취하) / 해결건수(조정전 합의+조정안수락 +신청취하) + 미해결건수(조정 안불수락+합의 가능성 없음)] × 100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통계자료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이용자 보호(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확산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환경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AI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에 따른 AI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AI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규범체계, 이용자 피해구제, AI 활용·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 AI·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규범 마련 추진

*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 규정
**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제시

○ AI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중심의 법령 안내서 마련 추진

○ 생성형 AI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피해 구제 체계 확립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기술 이용자 보호 정책기반 조성

-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신유형 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행태 및 인식 변화를 진단·검증하여 AI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의 실증적·실효적 근거 마련을 위한 'AI 이용자 패널조사' 추진

- AI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발굴,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 등을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 AI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자 의견 수렴을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5.2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연구반 구성·운영	'25.2월~3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개발 연구반 구성·운영	'25.3월~	
2/4분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3차 회의 개최	'25.5월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ICT 법제 연구반 구성·운영	'25.6월~	
3/4분기	AI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방안 연구반 구성·운영	'25.6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25.7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4차 회의 개최	'25.8월	
4/4분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25.11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25.12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발표(안)	'25.12월	
	AI 서비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 안내서 발표	'25.0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AI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3, 4차 회의 개최	'25.5, 8월
콘퍼런스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	'25.11월

□ 기대효과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중장기 플랜을 통해 건강한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

○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00)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기금	8.3	7.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	-	-	80 (신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오픈 여부와 플랫폼 주 기능인 신고와 관련 정보 제공을 모두 고려해 플랫폼 활성화율을 측정 - (플랫폼 오픈) 플랫폼 오픈 시 1, 그렇지 않을 경우 0 - (신고검증률) 유의미한 신고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신고 건수 대비 신고 내용 검증 건수를 검증률로 설정 - (정보제공건수) 첫 해는 하반기 오픈임을 고려해 32건으로 설정	[(플랫폼 오픈 점수)×0.2]+[(위험성신고 내용 검증건수/위험성신고건수)×0.4]+ [(정보제공건수/목표정보제공건수) × 0.4]	플랫폼 실적자료

성과목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신고 처리, 정책적·기술적 방지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규제 강화 등 대응체계 운영

○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플랫폼 등 서비스 활용 역량 제고 및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입점업체·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연구반 운영을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추진

○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홍보 등 인식제고 추진

□ 위치정보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 및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도모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공 DNA DB를 구축·확대하여 필터링 적용, 필터링 성능평가제도 고도화 등 추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청소년유해광고 점검 등 청소년보호 조치 강화 및 태블릿 PC용 청소년보호 SW 개발·보급 추진

○ 민간 자율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정보 판별 교육 및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 실시

○ 정보판별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모임 진행,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발간을 통한 국내외 허위조작정보 현황 및 정책 흐름 공유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정보판별 교육 활성화 (점)	신규	신규	신규	91.9	전년 수료율 목표치 대비 2% 상향, 전년 만족도 목표치 대비 1% 상향	((교육수료인원/교육수강인원)×100)×0.7+(교육만족도×0.3)	사업수행 결과자료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대부분의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전송되고 필터링 기술을 우회하는 지능적 수법이 지속됨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6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8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4년 상반기 스팸신고가 급증하였고 불법스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자문을 허용 등

○ 인공지능(AI)·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가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증대

- 특히, 장애인·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은 새로운 기술 활용 역량의 부족으로 디지털 시대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될 위험 존재

○ 디지털 이용 확대 및 인공지능의 일상화로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 정보편향, 권리침해 등 디지털 역기능 발생·심화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치정보법이 제정('05년도)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발전하는 산업현장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융합형 서비스의 확대로 신규 사업자와 대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국내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급속히 유포·확산되어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적 공동체 운영을 위협

□ 갈등요인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11월)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 및 관련 통신사 처벌 상향 등 규제가 강화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에 규제 부담으로 작용

○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입점업체·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

○ 위치정보사업자 등 정기실태점검 전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합리적인 점검계획 수립

□ 갈등관리계획

○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불법스팸 발송 및 법 위반 현황을 정부, 사업자(이통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간 공유함으로써 불법스팸 감축 노력·공감대 형성

○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

○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 기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Ⅱ-2-①)

□ 추진배경 (목적)

○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로 인터넷상 본인확인서비스* 및 연계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필요

* 본인확인이용건수('20년 20억건→'24년 28억건)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강화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 환경 조성

○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

○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의 선제적 발굴·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불편 예방 필요

○ AI·디지털의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등 인식제고 추진 필요

○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보호의 균형감 있는 위치정보정책의 추진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본인확인·연계정보 관련 제도 개선 및 점검 》

○ **(정책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 관련 법제정비 및 정책연구 수행

○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 수행, 연계정보에 대한 생성·처리 승인 심사 위원회 운영 및 이용기관 대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 수행

○ **(본인확인 지원업무)** 본인확인 업무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포털 운영, 연계정보 일괄변환 준법 검토를 위한 변환심의 위원회 운영 및 이용기관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통합모듈 표준화 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업무 지원

《 불법스팸 대응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스팸전송자 등 대상 행정처분 의뢰,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수사의뢰 지원

○ 휴대전화·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

○ 불법스팸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한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 등 현장 의견 수렴 추진

《 피해예방 교육·정보제공 및 제도 개선 》

○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계층별 맞춤형 교육,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역량 제고

- AI·디지털플랫폼 등 최신 디지털서비스 활용법 및 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실시, 장애인·노년층·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최신 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반영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내외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동향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이슈 리포트를 배포하여 시의성 있는 대국민 정보제공 추진

- 이용자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앱의 무선데이터 소모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유도

○ **(제도개선)** 서비스별 특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개선 추진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강화 》

○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디지털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5년 20만명 교육목표)

- 교육 참여를 통해 체험 과정에서 디지털윤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추진

※ 실습형 AI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24년 100회 → '25년 200회) 교육, 디지털 윤리 골든벨, 가족 및 청소년 캠프 등

- 직장인·대학생 등 성인 대상 악성댓글, 생성형 AI, AI개발, 딥페이크 등 일상·업무 속에서 경험하기 쉬운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 교육 추진

※ 성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목표 '24년 9.5만명 → '25년 11만명 확대

○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 디지털윤리 주간, 창작콘텐츠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생활 밀착형(공공시설물, 온라인 플랫폼 등) 홍보 추진

※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SNS 캠페인 및 배너광고, 콘텐츠 공동개발 등 추진

- 디지털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디지털윤리체험관과 디지털윤리 홈페이지(디지털윤리.kr) 운영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 및 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이용자 위치정보의 엄격한 보호 아래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내 및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추진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차세대 신규 위치정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위치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등 서비스 개발 환경 및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중소·영세 기업 및 청년·스타트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투자 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위치정보 관련 법·기술·서비스 동향 및 위치정보 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규모와 사업자 대상 정보 제공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자 등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측정 대상 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충족률 등) 등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 제고 유도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법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 정기실태점검 설명회 개최로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합리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신규·주요 사업자 점검강화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윤리 교육 수요기관 모집 및 선정	'25.1~2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 연구반 운영	'25.2~11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대상 앱 선정 및 측정 계획 수립	'25.2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25.2~3월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발간	'25.2~12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25.2~12월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	'25.3월	
	'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25.3월	
	본인확인기관 정기 적합성 심사 추진	'25.3~11월	
	대상별 디지털윤리 교육 운영	'25.3~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 개최	'25.3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컨설팅 실시	'25.3월	
2/4분기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25.3~9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설명회	'25.4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효과조사 실시	'25.4~11월	
	위치정보사업자 법·제도 설명회	'25.4~5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25.5월	
	'25년 상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	'25.5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추진	'25.5~7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	'25.5~12월	
	디지털윤리 가족캠프 운영	'25.6~9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25.6~9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25.6~10월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 수행	'25.6월~12월	
3/4분기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 운영	'25.7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대상 사업자 ARS 현황조사	'25.7~8월	
	공모전 선정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25.7~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보수교육 실시	'25.8월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25.8~11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대상 성과 조사 추진	'25.8~11월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분석 및 공개	'25.9월	
	'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25.9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25.9~11월	

4/4분기	‘25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	’25.11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집계 및 공개	‘25.11월	
	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 및 시상	‘25.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완료 및 성과 집계	‘25.12월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및 효과조사 결과 분석	‘25.12월	
	디지털윤리대전 개최	’25.12월	
연중	사업자별 월별 스팸신고현황 대국민 공개	’25.2월~	
	불법스팸 대응센터 운영 및 스팸신고 접수·처리	연중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연중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연중	
	디지털윤리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연중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보 제공	연중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현장 간담회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본인확인)** 본인확인서비스 통합 인증모듈 도입 관련 본인확인기관 및 인증대행사 등 유관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희망기관 대상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 설명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본인확인서비스 통합 인증모듈 도입 관련 유관 사업자 설명회	3월
설명회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계획 설명회	3월

○ **(스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자 의견 등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3/6/9/12월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및 평가위원 간담회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의견수렴	'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대한 지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 수렴(서면)	3월
사업자 설명회	'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변경사항 등 설명	4월
평가위원 간담회	'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운영 계획 등 안내 및 의견 수렴	5월

○ **(피해예방 교육)** 교육 개선사항, 교육 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 간담회	교육 협력기관 담당자, 강사, 교육생 대상 교육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4~11월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디지털윤리 교육 현장 및 캠페인 현장 방문	'25.8월

□ 기대효과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불법스팸 차단 강화로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현황 공개를 통해 통신사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노력 유도 및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기여

○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및 권익 제고

○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 추진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 위반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주요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합리적인 점검계획 수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48.12 (80.33)	47.92 (80.61)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3.76	13.76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7)		2.15	2.15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9)		32.21	32.0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3251)	기금	130.63 (213.32)	127.9 (204.42)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64.63	61.4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14.00	13.6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19.7	19.2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318)		32.3	33.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8.2	18.7	19.2	19.5	전년도 교육역량 향상율 목표대비 0.5%p 상향된 19.5% 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점수-교육전 역량점수)/교육전 역량점수]×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12	12	15	12	스팸 수신량의 최근 3년간 스팸 수신량 평균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디지털윤리 교육 만족도(점)	89.5	90.1	91.0	91.6	최근 3년간 실적(21~24)의 평균증가폭(0.7점)을 고려하고 도전적으로 0.1점을 더해 0.8점을 상향한 91.6점을 목표로 설정	디지털윤리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91.2	91	91	91	과거 실적 및 추세,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관련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0.5)+(맞춤형 컨설팅 만족도×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Ⅱ-2-②)

□ 추진배경 (목적)

○ 불법음란정보 및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

○ 국민 스스로 정보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교육 운영

- 전국 중·고등학교 및 지역별 복지기관(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관과 교육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우수 교육 사례와 결과물 공유·시상

- 팩트체크 교육 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수 진행

- 국내외 팩트체크 관련 정책 및 연구 현황 등을 공요하기 위한 팩트체크 동향리포트 발행

○ 허위조작정보가 포털·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한 확산 방지 추진

-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 자체 심의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등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상시)

○ 허위조작정보 정의, 생성·유포 단계별 대책 및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를 포함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안)' 마련('25.12월)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등)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강화

* AI기반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등 활용

○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신고기능, 사전안내여부,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등

○ 방통위 주관 하에 '관계기관 협의회'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회'를 운영

《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신문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인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광고 등 점검 추진

○ 사이버안심존 앱의 서비스 편리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고도화를 진행 및 청소년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iOS 자녀용 앱 개발 및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운영학교 모집 및 선정	1~2월	
	디지털성범죄물 대응 강화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회 참석	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1분기)	3월	

2/4분기	맞춤형 정보판별교육(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4~6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3~5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 선별 및 지정안내	4월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6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2분기)	6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6월	
3/4분기	맞춤형 정보판별교육(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7~9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7~9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3분기)	9월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9월	
4/4분기	맞춤형 정보판별교육(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10~12월	
	청소년보호SW 고도화(자녀용 IOS 앱개발)	4~11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현장 점검 실시	9~11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태점검	10~12월	
	허위조작정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	11월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안) 마련	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4분기)	1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12월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 결과 발표	12월	
연중	불법음란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연중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DNA 필터링 시스템) 성능평가 수행	연중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애로사항 등 사업자 의견 청취(상시)

-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안)' 마련 시 협의체 의견 반영('25.12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	상시

□ 기대효과

○ 웹하드 사이트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 정부와 민간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허위조작정보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민의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가속화·다양화되는 허위정보 생산에 선제 대응하는 건전한 미디어 활용 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Ⅰ-2-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기금	62.91 (213.32)	56.61 (204.42)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6.29	14.66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46.62	41.95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Ⅱ-1-일반재정②)			
②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기금	10.27 (780.25)	4.75 (761.52)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317)		10.27	4.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115	108	103	100	<기술적 조치 개선> o 지속적 증가추세 반영하여 전년 실적치(209,560건) 대비 1% 상향한 목표치(212,000건) 설정 <불법음란정보 특징값 제공> o 음란물 채증자료 중복 등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치(99,918건) 대비 1% 상향한 목표치(101,000건) 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0.5]×100+[(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0.5]×100	실적보고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성능평가 수행률(%)	98.7	97.1	98.9	99	* 성능평가 신청 대비 처리율을 전년 대비 2%p 증가한 99%로 설정, 평가기술 고도화 건수 달성률을 100%로 설정	[수행건수/신청건수×0.5]×100+[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목표 II-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통신 분야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 불편 해소

○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를 점검·조사하고 이용자 피해·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앱 마켓·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8	8	10	1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4년도 실적인 10건을 감안하여 '25년에 10건을 목표로 설정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은 방송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실적	내부자료,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5.7.22.) 후 시장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시책을 마련할 필요

○ 플랫폼 사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산업생태계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 산업에서 플랫폼 산업 중심으로 변화

- 단기간 내에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들의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피해 및 부작용도 함께 증가

○ OTT시장 확대에 따른 유료방송가입자의 이탈(코드커팅*), 방송광고시장 위축, 콘텐츠 수급 비용 급상승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 성장 한계

* 케이블TV, 인터넷TV 등의 유료 유선방송의 가입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

□ 갈등요인

○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및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알뜰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견 표출이 예상

○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가에 따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급격한 요금 인상 등 이용자 불편·피해 사례 증가

○ 홈쇼핑 등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공급 및 채널 사용 대가, 채널편성 관련 이견 등에 대해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소 추진

□ 갈등관리계획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관련 제도 개선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이견을 조율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피해·불편 사례를 사전 발굴하고 제도개선 추진

○ 홈쇼핑 등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공급 및 채널 사용 대가, 채널편성 관련 이견 등에 대해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소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Ⅱ-3-①)

□ 추진배경 (목적)

○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통신시장 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자 피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관 역량 강화 필요

○ 생성형 AI,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피해 사례 발생으로 신속한 조사 필요

○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최근 조사·제재 사례가 없어 불법스팸 유통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이용자 피해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 정비('25.9월)

○ **(규제 집행력 강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상향 추진('25.9월)

○ **(방송통신서비스 동향 분석)** 이용자가 급증하는 서비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미국·EU·일본 등 주요 규제기관의 동향 수집·분석(연중)

○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방송·통신분야 조사 관련 직무 교육, 디지털 포렌식 운용 교육을 통해 조사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25.6월)

○ **(신유형 서비스 조사)** 생성형 AI,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 이용자가 급증하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조사('25.6~9월)

○ **(기업간 통신분야 조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통해 기업간 통신시장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25.4월)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정명령 공표기준 개정안 마련	'25.3월	
2/4분기	기업메시징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보고	'25.4월	
	방송통신 분야 주요이슈 및 규제 동향 파악	'25.6월	
	방송·통신 시장 조사관 교육 실시	'25.6월	
	온라인 여행플랫폼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결과 보고	'25.6월	
3/4분기	방송통신시장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25.9월	
	방송통신 분야 주요이슈 및 규제 동향 파악	'25.9월	
	생성형AI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결과 보고	'25.9월	
4/4분기	방송통신 분야 주요이슈 및 규제 동향 파악	'25.12월	
	조사심결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완료보고서 제출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통신 사후규제 정비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방송·통신 사후규제 정비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중
회의	방송통신 분야 규제 동향 관련 전문가 회의	연중

□ 기대효과

○ 방송통신 사후규제 관련 법제 정비 등 규제 정책 수립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규제 집행의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조사체계 개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	-	100	100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규제정비 추진율과 조사 효율화 추진율을 측정, '24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5년 목표를 100%로 설정	< ① + ② > ① 규제 정비 추진율(0.5) -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0.1) +(불공정 행위 유형 분석 ×0.2) +(하위법령 정비안 마련×0.2) ② 조사 효율화 추진율(0.5) - (규제 동향 분석 ×0.2)+(조사관 교육×0.1)+ (신유형 조사 추진×0.2)	법·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동향분석 보고, 조사관 교육 자료 등

2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Ⅱ-3-②)

□ 추진배경 (목적)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이동통신시장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 점검·조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

○ 구내통신 서비스 이용강제, 유통점 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 밀접한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등 권익을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25.7월)

- 개정 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효과적인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개선 방안 마련

○ 이통사·제조사의 시장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 행위 방지 방안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 마련(~'25.12월)

-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부, 통신사,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假)단말기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운영

○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 및 정보취약계층 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 시기·대상별 핀셋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점검· 및 조사 추진(연중)

※ 신규단말기 출시·신학기 전후, 온라인성지점·집단상가 등에 대해 ▲허위과장고지,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지원금 약속 후 미지급 행위,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단속

※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유형과 건물관리주체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마련(~'25.2월)

*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4.7.31. 시행)

○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시장동향 파악 및 불공정 행위 점검(연중)

- 사업자 자율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검토

○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현황 점검 및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모니터링(주요 스마트폰 신규 출시 시)

- 이용자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선탑재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편익 증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25.1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제정	'25.2월	
2/4분기	비필수 삭제 제한 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실태점검 등 조치	'25.6월	
3/4분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5.7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용자 피해 특별 예방 기간 운영	'25.7월	
4/4분기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 마련	'25.12월	
	비필수 삭제 제한 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실태점검 등 조치	'25.12월	
연중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제조업자 및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연중	
	경품 제공 수준,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연중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관련 이통사, 제조사,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방향 논의 관련 이통3사·제조사 부사장 간담회 개최	'25.1월
현장방문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이동통신 유통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청취	'25. 3분기

□ 기대효과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의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이용자 혼란 방지 및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

○ 실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집합건물 입주자의 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선택권 제고 및 비필수 삭제제한 앱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15.99 (전체단위 사업비)	16.13 (전체단위 사업비)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24.99	19.4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4.99	-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1.1	-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98	27.05
- 방송통신시장서비스 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4.89	15.02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4.99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지수(점)	-	-	80.7	83	전년도 지수 실적을 기초로 하고,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감소,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용자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강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①×0.4)+(②×0.3)+(③×0.3)> ①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건수) ×100 ② 유무선 정책제도 개선 건수 : 4건 ③ 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 4건	①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②제도개선 관련 보고서,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③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3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Ⅱ-3-③)

□ 추진배경 (목적)

○ 부가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사 강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조사 강화 및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전 주기에 걸친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조사 추진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심의·의결)를 통해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환경 조성

-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사실상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이용자 피해·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점검·조사

- 쇼핑·배달·교육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유발 행위 집중 점검

○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점 발굴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대응 및 앱 마켓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플랫폼시장 및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사-6 :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앱 마켓 내 모바일 앱 대상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사항 개선요청

- 인터넷 플랫폼 산업 생태계 주요 현안 파악 및 신유형의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 앱 결제 안심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앱결제 피해 관련 뉴스 및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 등 정보 제공

○ **(이용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논의 및 발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다크패턴 피해(기만 광고 노출, 교묘한 화면 설계로 구매유도 등) 사례집 발간

- 다크패턴 금지행위 세부유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온라인 구독형서비스 全 단계(가입→이용→해지)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플랫폼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25.1월~	
	인터넷 불편광고 관련 금지행위 상반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25.3~5월	
2/4분기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및 개선	'25.4월~	
3/4분기	인터넷 불편광고 관련 금지행위 하반기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25.8~10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5.8월~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실시	'25.9월~	
4/4분기	온라인 구독형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25.10월	
	다크패턴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25.12월	
연중	민생밀접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피해유발 행위 집중 점검	연중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정보제공	연중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연중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운영	연중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연구반 운영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앱 마켓 실태조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조사 요청서 협의·조정 및 앱 마켓사업자와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25.5월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관련 안내 및 부가통신사업자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관련 안내 및 사업자 의견수렴	’25.6, 11월

□ 기대효과

○ 급격한 성장으로 시장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로 자유로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5.17	5.17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4.99	4.99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0.62	0.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	-	신규	85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① 부가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달성기준을 전년 실적(1건)대비 200%(2건)로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② '22~'24년도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3개년 평균치(49%)에서 1%p 상향한 50%를 목표치로 설정 ③ 플로팅광고 이용자 권익 증진 관련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25년 목표 설정> * 플로팅광고 모니터링 추진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100% 실시 ** 연간 개최 목표 : 반기별 1회 총 2회 ***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 광고 등장 등에 따른 안내서 개편 필요로 매년 1회 목표치 설정	<(①×0.4)+(②×0.3)+(③×0.3)> ① 부가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건수 달성률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건수/목표치)×100%] ②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개선조치 건수/개선권고 건수)×100%] ③ [(불편광고 측정건수 / 불편광고 측정목표치*)×100]×0.4 + (사업자 설명회 개최**)× 0.3 + (플로팅광고 관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개선***)× 0.3	①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②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③실적보고서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II-3-④)

□ 추진배경 (목적)

o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정체 및 사업자간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열경쟁으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o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조성 필요

-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홈쇼핑사업자-납품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o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방송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 방송채널 재계약, 송출 수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연중)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가입자 접수민원 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추진(연중)

※ 방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ㅇ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업계·학계·이해관계자 등의 활용을 지원(~'25.6월)

ㅇ 유료방송사의 케이블TV 공동주택 단체수신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별 약관 주요사항 이행여부 등 현황 점검(~'25.5월)

ㅇ 유료방송 가입 해지시 단말장치(셋톱박스) 등 방송 장비 반납 필요 사실 안내를 통해 이용자 불편 사전 예방('25.7월~)

○ 홈쇼핑방송 시장 등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25.8월~)

○ 지상파·종편PP의 건강정보프로그램 방송시간대에 홈쇼핑방송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지상파·종편-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25.12월)

○ 주파수필터를 설치하여 방송이 나오지 않게 만든 후 AS 접수 시 현장 영업자에게 이관하여 고가 상품 가입을 유도한 행위 조사(~'25.12월)

○ 연속성 있는 방송분쟁분쟁조정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채널 재계약, 송출수수료 협상 진행 경과 등 갈등 상황 모니터링 및 당사자간 협상 중재·지원 등으로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사전 방지(연중)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유료방송 케이블TV 단체수신계약 현장점검 결과보고	'25.5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25.6월	
3/4분기	유료방송 해지 가입자 대상 단말장치 반납 안내 강화	'25.7월	
	홈쇼핑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5.8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5.8월	
	유료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관련 설문조사	'25.8월	
4/4분기	이용자 권익보호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25.9월	
	지상파·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파악	'25.12월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25.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4회)	분기별 1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4회)	분기별 1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유료방송사, 관련 협회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청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	'25.3,6,9,12월

□ 기대효과

○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시정, 제도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방송시장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등을 전 국민에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6.32	5.65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지원(312)		6.32	5.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공통)(점)	73.5	71.3	71.5	71.0	o 사업자 유형별* 불공정 행위 개선도 평균 (*유료방송사, PP, 지상파 방송사,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o 거래계약 상대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행 개선도, 사후규제 정책 실효성, 정책홍보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	리커트 5점 척도(0점에서 100점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	-	신규	100	o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5년 목표 설정> * 연간 개최 목표 : 분기별 1회 총 4회 ** 과거 3년('22~'24년) 실적의 평균과 목표부여(표준편차)방식을 활용하여 목표치 설정 : 22,289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개최*)×0.5 + (모니터링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분석 건수**)×0.5	실적보고서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24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방송매출액 합계는 18조 9,575억 원으로 전년대비 8,004억 원(△4.1%) 감소하여, 역성장을 기록

< 연도별 방송사업매출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8조 118억 (1.9%)	19조 4,016억 원 (7.7%)	19조 7,579억 원 (1.8%)	18조 9,575억 원 (△4.1%)

- '23년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4,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감소, 방송광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격한 형식규제 개선 등 지원 필요

o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주체로서 그간 방송한류를 견인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콘텐츠 확대 및 유통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지상파 방송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 도입된 방송편성·광고 등의 규제체계는 방송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글로벌 OTT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OTT는 적자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으로 글로벌 OTT와 격차 확대

※ ('23년 영업적자) 티빙 △1,420억원, 웨이브 △791억원, 왓챠 △221억원

-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해당 사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OTT 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o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우수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건전한 방송문화의 확산 필요

o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청환경 조성 필요성 부각

o OTT를 통한 콘텐츠 소비행태 증가 및 등록PP 채널의 공적역할 강화 요구 등의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확대 시행 필요

o 사업자별·매체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등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필요

◇ 그간의 성과

o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가 동일 심의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

o 2024 파리올림픽 중계방송의 과도한 중복 중계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방송사에 순차편성을 권고('24.7월)

o 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통해 저출생·환경 등 사회적 이슈 및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발굴·시상('24.11월)

o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시청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이 탑재된 맞춤형TV를 3.2만대 보급

o 최신 음성인식·AI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영상을 실시간 자막·아바타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동시에 변환하여 제공하는 '이어줌' 서비스 제공

o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방송 편성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방송법」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한시 완화* 우선 시행('24.7월)

* 지역MBC(20→14%), 지역민방(3.2→2.6%)의 의무편성비율 2년간('24.7월~'26.6월) 완화

o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시장 조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지원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

o 방송프로그램 제작 거래 실태조사(연1회),「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행점검(연2회) 등 실시

o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방송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항목 등을 개선하여 첫 평가 시행('24.12월)

o 중간광고 허용 등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가상광고 세부기준 및 협찬고지 규칙」개정을 통한 형식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과 함께,

- 협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허용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0월) 및 입법 지원

o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

◇ **중점 추진 내용**

o 방송편성 규제개선을 위한「방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 확보 및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o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OTT 산업 경쟁력 제고

o 방송사-외주사 간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 등에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이행점검과 외주거래 환경 실태조사 지속 실시

o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신규 광고주를 창출하도록 하여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o 방송광고·편성·외주제작시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

o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OTT 산업 발전 기반 조성

o 등록PP 채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적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를 시행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 제공 환경 조성

o 방송평가 제도개선으로 사업자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4	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조원)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①장애인방송 편성 분량(시간)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②방송광고 규제 검토 및 개선(건)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사 심의제재 강화를 통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 사업자별·매체별 평가 형평성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방송사-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추진

○ 국제 OTT 포럼 개최·해외 OTT 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시장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지원으로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도모

○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된 형식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24	'29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17.7	18.0	19.4	19.8	19.0	20.8	'20~'24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1.8%)을 고려	과년도 지상파 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기타 : 해당 없음

성과목표 III-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 심의제재 강화 등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등 우수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을 통해 방송사·제작자의 사기진작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 신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기반 자막·수어 변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37	40.2	45.1	50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보급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체 누적보급 대수/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수)× 100	사업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음주·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

○ 디지털 기술 발달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인터넷·모바일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기 접근성 제고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 갈등요인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 프로그램 경쟁력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과 자체심의 역량 제고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Ⅲ-1-①)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선 사항 검토

○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방송사 제재 조치 처분,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예방 및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연중)

○ **(보편적 시청권 개선)** 전 국민의 동등한 시청 기회 부여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선 사항 검토(하반기)

○ **(방송언어 환경 개선)**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방송사를 통한 언어순화 자막 고지 추진(상·하반기)

○ **(우수 방송 프로그램 시상)**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을 통해 사회·문화 발전, 한류 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시상으로 방송 제작인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방송문화 확산 촉진(하반기)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	‘25.2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작품접수	’25.3월~4월	
2/4분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25.4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4월~6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25.5월	
3/4분기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25.8~9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25.9월	
4/4분기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25.10월	
	국민관심행사 관련 고시 개선방안 검토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자율적인 판단을 촉진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등 제고

○ 국민관심행사 관련 고시 개정 사항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자(문체부·방송사업자·학계 등) 의견수렴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논의

○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방송사업자 및 제작자의 제작의욕 고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회의	‘25.2분기~
회의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 관련 의견수렴	’25.8~9월
현장방문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25.9월(예정)
간담회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방심위)	연중

□ 기대효과

○ 방송사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제고에 기여

○ 우수 방송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활동,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365.60 (780.25)	330.40 (761.5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		365.60	330.40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3.10 ()	2.90 ()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301)		3.10	2.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점)	67.0	66.5	64.2	64.3	최근 3년간 실적치 추세와 전년도 실적치(64.2)를 감안하여 '25년 목표점수를 64.3점으로 설정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 3개 항목 : ① 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 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 방송관련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송 접근권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

< 국정기조와 연계성 >

o (국정과제 59-2)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플랫폼 고도화, 신기술 개발 등 추진

o (업무계획 3-1)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성 확대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활용하기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TV 지원 확대('24년 32,000대 → '25년 35,000대)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연 4,000여 편)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연 50여 편) 제작·보급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시청 편의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방송 유형별 품질 시범평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품질 평가제 방법 정교화 및 기준 마련

○ AI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미디어(스마트폰·태블릿 등)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막을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고도화를 지속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설명회 개최	'25.2월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사업 사업자 간담회	'25.3월	
2/4분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선정	'25.5월	
	장애인방송 VOD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선정	'25.5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접수	'25.5월	
3/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25.7월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25.8월	
4/4분기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25.10~12월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및 개선의견 조사	'25.10~12월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애인 방송 정책 등 현안에 관한 이해관계자(학계·법률·장애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해 장애인방송·온라인(VOD) 제작지원 관련 방송사업자 설명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25년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및 제작 지원 관련 사업자 설명회	'25.2월
설명회	'25년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25.3월
설명회	'25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자 설명회	'25.3월
간담회	'25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수시
조사	'25년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실시	'25.10~12월

□ 기대효과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201.76 (780.25)	218.70 (761.52)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201.76	218.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단위 : 시간)	- 신규 771,004	760,000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의 제공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장애인방송 필수지정 방송사업자 전체의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의결

성과목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 조사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방송 편성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제 OTT 포럼 개최·해외 OTT 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시장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지원으로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도모

○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 및 방송콘텐츠 소비행태 증가 등의 방송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등록PP 채널 콘텐츠 대상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평가 항목 개선 및 공적채널을 포함한 확대 시행

○ 사업자별·매체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된 형식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규 광고주 창출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신규	85.2	84.9	82	각 구성요소별 '25년 각 목표치의 산술평균값을 목표로 책정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 86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 78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②(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2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그간 방송 한류를 견인해 온 방송사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확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통채널 다변화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 방송의 매체영향력이 과점적 지위를 점했던 당시에 도입된 방송광고·편성 등의 규제들이 방송 제작·유통·소비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적절한 대응에 한계

○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 사업자의 시장잠식에 대응하여 국내 OTT 산업의 자생력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분석 등 OTT 해외진출 지원 필요

○ '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23년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는 18.96조 원으로 전년(19.75조 원) 대비 4.1% 감소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8) 4.8% → ('20) 1.9% → ('21) 7.8% → ('22) 1.8% → ('23) △4.1%

< 방송매체별 방송사업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



- ‘23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8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형식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 필요

□ 갈등요인

○ 표준계약서 활용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양상으로 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 필요

* 외주제작 계약서 수익배분 관련 사항 중 ‘협찬수익 배분기준 명시’ 등

○ 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사업이 문체부, 과기정통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방통위 차원의 OTT 플랫폼 지원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내의 경우 기존 방송 미디어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OTT 시장도 성장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분야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인식이 높아짐

○ 방송시장 변화와 방송사업자의 공적역할 강화 요구를 반영한 평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평가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평가 지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방송광고 규제 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 방송분야 규제 개선으로 시청률 등 방송광고 판매 증가에 따른 기타 매체(온라인매체 등) 이용과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하 우려도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 방송광고 제작지원은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산업부·중기부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4) 기타

□ 광고시장 현황

○ 방송통신융합 기술의 발전,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 및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23년 방송광고 매출액은 2조 498억 원으로, 10년 전(4조 2,281억 원)에 비해 40% 이상 감소

※ 같은 기간 온라인(인터넷+모바일)광고 매출액은 '14년 3조 723억 원에서 '23년 9조 216억 원으로 290%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

- 총 광고 매출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14년 38%→'22년 16.4%)

< 방송광고와 온라인광고의 매출 변화 >



방송광고 vs 온라인광고 매출액 추이



전체광고비 대비 매체별 비중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각 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각 년도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온라인·인쇄·기타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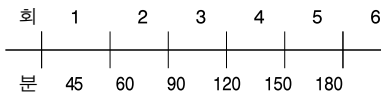
○ **(개요)** 법령에서 열거하는 7가지*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이 금지되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방송법」 개정 필요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 또한, 방송광고 유형별로 크기·횟수·장르 등 복잡한 규제 적용

○ **(주요경과)** '73년부터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방송광고총량 규제 완화('15년),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21년)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진 중

< 방송광고 규제현황 >

유형	정의	현행 규제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20/100 (편성시간당 일평균 17/100) ※ 중간, 자막, 시보 광고 포함 ·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1/64이상)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횟수,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1/32)·음성으로 고지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 방송사업자 명칭 또는 프로그램 안내 고지시 · 화면 1/4이내
가상광고	프로그램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가상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	· 오락, 스포츠, 스포츠 보도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가상광고 포함여부 고지(1/16), · 스포츠 중계시 선수 등 가림 금지 · 음성, 음향 금지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오락, 교양 장르(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금지) · 프로그램 7/100, 화면 1/4 이내 · 구매언급 금지 · 간접광고 포함여부 고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Ⅲ-2-①)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19.7월)

-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낡은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고, 방송산업 위기 극복의 장애요소로 작용

- 방송환경 변화, 규제 도입취지, 실효성을 고려하여 편성의 자율성과 방송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 개선 필요

< 국정기조와 연계성 – 편성규제 합리화 및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

○ **(국정과제 27-2)**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 장르간 융합, OTT 보편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편성의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편성 규제 개선 추진

○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24.3)**
- (2-❸)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
  - **(제작원별 및 장르별 프로그램 의무편성 완화)** ▲쿼터 규제를 총족하는 수준의 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장르 융·복합 등 고려, 오락물 편성규제 폐지
- (4-❶)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조성
  - **(공정환경 조성 및 권리보호 강화)**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추진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중소·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 검토

○ **(부처업무계획)**
- (2-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방송편성)**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장르 융합에 따른 모호성 제거, 편성 자율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현실화
- **(1-③)**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방송사-외주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체결, 수익분배, 제작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외주거래 실태조사 강화('24.12월, 문체부 공동)

○ 영업적자* 상태의 국내 OTT 사업자가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장 지배적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 '23년 영업적자: 티빙 △1,420억원, 웨이브 △791억원, 왓챠 △221억원(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국제 OTT 포럼 개최, 해외 OTT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정기조와 연계성 -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o **(국정과제 27-3)**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 (OTT 국제행사) OTT 국제포럼 등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시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등 지원

o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24.3)
- (3-❶) 글로벌 홍보 및 유통 등 통합 지원
  • (국내OTT 해외 홍보) '국제OTT 포럼' 등을 활용해 OTT 콘텐츠 홍보 지원
  • (해외 통합정보 제공) 해외시장 현황, 법·제도, 이용자 행태 등 종합정보 제공

o **(부처업무계획)**
- **(1-2)**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 (OTT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국제포럼 개최 및 해외 현지 OTT 이용행태, 법적·제도적 규제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 OTT 해외진출 전략수립 지원

○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요구 및 방송콘텐츠 소비행태 등의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등록PP 채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가 공적기능 평가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

< 국정기조와 연계성 – 콘텐츠의 공익성·공적역할 평가 >

o **(국정과제 6-4)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 공적 채널 콘텐츠의 공익성·공적역할 등 공적 기능에 대한 평가 시행

○ 매체별 형평성 제고와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 역할을 제고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국정기조와 연계성 –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

ㅇ **(①-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방송평가 제도개선)** 저출생 극복, 재난방송 확대 등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

- 저출생 극복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신설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편성 시 가중치(150%) 부여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완화>

ㅇ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계약체결, 수익분배, 제작과정에 대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연2회) 및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연1회)를 통한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ㅇ 미디어 시장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다채널 시장으로 확대·재편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편성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방송법」개정안 국회 제출

-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편성 자율권 확보를 위해 오락프로그램 및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 완화 등

ㅇ 중장기 편성규제 개선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ㅇ 국내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안착을 위한 진출예정 국가별 OTT 시장현황, 법·제도적 규제 및 현지 이용자들의 OTT 사용요금제, 선호장르, K-미디어 콘텐츠 선호도 등을 조사

※ 2025 해외 OTT시장 조사 : 인도, 프랑스, 태국, 아르헨티나
2025 해외 OTT이용행태 조사 :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튀르키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콘텐츠 대상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확대 시행>

○ OTT를 통한 방송콘텐츠 소비행태 증가 및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 요구 등 방송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시행

- OTT 판매 가중 및 공익기여도와 같은 공적역할 평가 기준 적용 등

<방송평가 제도개선>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 하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5.1~6월	
2/4분기	「2025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25.4월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25.4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 기획 등 준비	'25.4~6월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방송평가규칙 개정	'25.6월	
	편성규제 및 관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25.6~12월	
3/4분기	202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 발표	'25.7월	
	방송평가심의 관련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25.9월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	'25.7~9월	
	('25년 상반기 실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25.7~12월	
4/4분기	방송평가심의 관련 방송평가위원회 개최	'25.10월	
	「2024년도 방송평가결과」 발표	'25.11월	
	국제 OTT 포럼 개최	'25.11월	
	202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 발표	'25.12월	
	편성규제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25.12월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보고서 발간	'25.12월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외주제작)** 지상파·종편PP 제작·정책담당자 대상 외주제작 현황과 구체적 거래관행 파악 등 실태조사 실시

○ **(방송편성)** 편성규제 개선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OTT)** 국내사업자·콘텐츠 산업계·학계로 구성된 OTT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해외 OTT 조사 설계, 국제OTT포럼 주제 선정, 신규사업 발굴 관련 등 의견 수렴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사업자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

○ **(방송평가)** 방송평가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방송평가 제도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25.4월
설명회	사업자 대상 평가기본계획(초안) 설명 및 의견 수렴	’25.5월
회의	해외 OTT 조사 설계, 국제OTT포럼 주제 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	‘25.3~12월
회의	편성규제 및 관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6~12월
인터뷰	방송사-제작사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25.8~10월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편성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편성·제작을 장려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안착과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국가별 법·규제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내사업자의 성공적 해외진출 지원과 OTT산업 경쟁력 확보

○ 등록PP 채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및 공적역할 강화로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자별 평가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방송평가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3 (780.25)	2.7 (761.52)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3	2.7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14.71 (96.56)	14.5 (82.85)
▪방송평가기반조성(302)		8.71	8.5
▪OTT산업 경쟁력 강화(341)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85.2	85.5	86	86	전년도 실적을 유지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설문조사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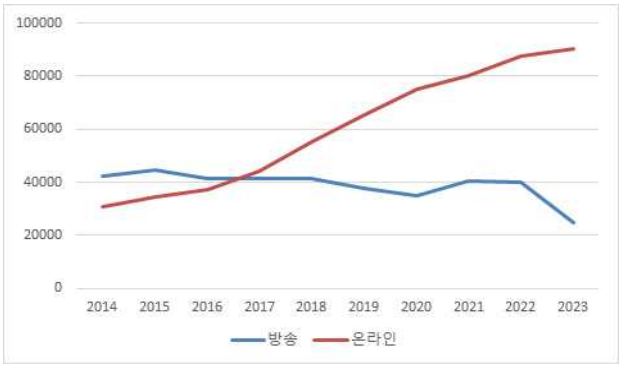
2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Ⅲ-2-②)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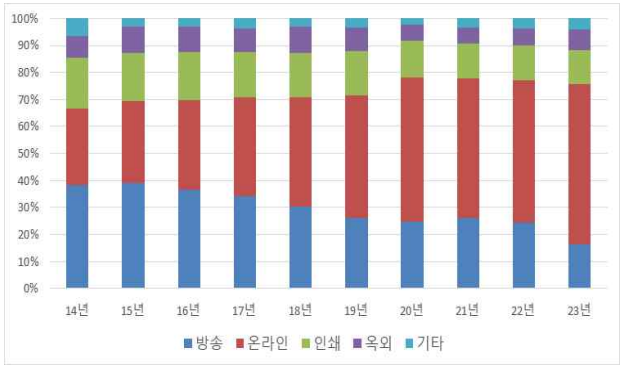
○ **(방송광고 규제개선)**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매체광고시장이 역전되고 제작비가 급증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 악화

-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방송광고는 '73년 만들어진 칸막이식 광고규제가 유지되어 방송광고 산업 성장 제한

< 방송광고와 온라인 광고매출 변화 ('14~'23) >



방송광고 vs 온라인광고 매출액 추이



전체광고비 대비 매체별 비중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각 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각 년도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온라인·인쇄·기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동 지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혁신성장 유도,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가 기업 인지도 제고, 매출 및 고용 증대에 효과적이나 비용이 부담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정기조와 연계성(1) – 방송광고 제도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국정과제 27-2)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혁신**

- 예외적인 금지사항 외 원칙적으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 제작비·지역방송 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처업무계획 2)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 검토 및 추진(방송법 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광고·협찬고지 등 제도개선 >

○ **(규제체계 전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해 열거된 유형의 방송광고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추진

- 「방송법」 개정안 마련 시,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권 보호방안 수립 병행 추진

○ **(고시 개선)**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확보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선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 **(경제적 효과)**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50개 사(TV 37개사, 라디오 13개사), 소상공인 193개 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실시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25. 1월	
	중소기업(1차)·소상공인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5.3월~4월	
	중소기업(1차)·소상공인 지원기업 방송광고 지원 및 컨설팅 제공	'25. 4월~	
2/4분기	중소기업(2차)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5.6월~7월	
3/4분기	방송광고 및 협찬 규제체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마련	'25.9월~	
4/4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효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25.12월~	'26.2월 완료
	방송광고 등 규제체계 개선안 마련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및 협찬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방송광고 및 협찬 규제체계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2분기

□ 기대효과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복지를 증진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지원 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여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52.24 (96.56)	41.61 (82.85)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23.56	18.83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340)		28.68	22.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신규	84.7	83.7	78.0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자의 전반적인 사업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77%) 보다 1%p 상향한 목표치 설정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x0.5)+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x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방송광고 규제 검토 및 개선(건)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건수 포함	신규	7	8	6	반기당 1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기준으로 전년도 목표치(5건)보다 1건을 상향하여 소관법률의 규제 재검토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이해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건	이해관계자 회의 공문 및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o 방송통신 분야의 낡은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o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규제 관련 외국 정부·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K-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등을 위해 교류협력 활동 지원

o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 관련 교육과정 등 제공

◇ 그간의 성과

o (정부혁신) 국정과제,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주요정책을 발굴·추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성과 공유

o (규제혁신) 방송통신 분야의 낡은 규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o (국제협력)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 활성화

-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o (공직문화 조성)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o (정책소통)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언론과 소통을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지지 확보

◇ **중점 추진내용**

- o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통신 정책을 발굴하고,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
- o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구현에 기여
- o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o 법령정비 시 자체 규제심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 규제정비 추진 지원
- o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협 및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해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및 공동제작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 지원
- o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 수행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정보보안 강화, 직장문화 개선 등을 적극 지원
- o 주요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적극적·다각적 소통과 홍보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4	8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②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②혁신과제 이행률(%)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실적 추진율(%) ②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③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상시학습 활성화율(%) ②연가활용 달성도(일) ③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④직원초청행사 만족도(점)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①보안점검 달성률(%) ②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③적극행정 활성화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②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정책소통 활성화율(%) ②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국민참여 콘텐츠 실적(건) ②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③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점) ②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점)

전략목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정비 및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관련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공동제작 협정제작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캐나다·태국 등 FTA 체결국 대상 방송공동제작 협정 추진,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시상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2) 성과지표 : 해당없음

(3)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성과관리 추진

-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 방통위 내 주요 정책·사업부서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도모

○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주요정책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 수행 성과 창출

□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과학적 행정을 활성화하여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현안 해결

○ 방송·통신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체계 확립

○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상황 비상대비 태세 구축 및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문화 확립을 도모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적 차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토대로 조직 차원의 업무성과 극대화 실현 노력

□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 방송시설의 평시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보안 취약요인 사전 발굴·차단 및 보안업무 내실화 도모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2) 성과지표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5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22</th><th>'23</th><th>'24</th><th>'25</th></tr>
<tr><td>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방통위가 연초 수립한 업무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 주요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td><td>(이행실적 점검 횟수/3회)x100</td><td>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자료</td></tr>
<tr><td>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td><td>-</td><td>-</td><td>44.4</td><td>27.77</td><td>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한 정비율 산출
- '22년부터 '24년까지의 평균 실적 27.77%를 목표로 설정
<table><tr><th>연도</th><th>정비율</th></tr><tr><td>2022</td><td>16.7%</td></tr><tr><td>2023</td><td>22.2%</td></tr><tr><td>2024</td><td>44.4%</td></tr></table></td><td>폐지 또는 개선한 일몰규제 수/전체 일몰규제 수× 100</td><td>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td></tr>
</table>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요인

○ OTT 확산 등 방송통신·미디어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정책영역이 융합·분화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역기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미디어 신뢰성 저하 우려

○ 기상이변, 지진 빈도 증가, 신종 감염병 등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대응체계 운영 필요

○ 국제정세 격변 및 北 도발 대비 방송시설 무단 침입,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안보위협 대비 및 정보유출 차단 필요

○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안문서를 유출하거나 소극행정을 시행하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 가능

□ 갈등요인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환경 변화로 방통위 주요 정책이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간, 국내·외 경쟁, AI 등 신기술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등 정책여건 및 이해관계 복잡화

○ 美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 등 국제정세 격변에 따른 각 국의 외교 · 안보 분야 이슈 및 對南 무력도발 가능성 존재

○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민감정보 탈취 등 안보위협, 보안에 취약한 외국산 보안장비를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 존재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벌 형성 및 상대 세력에 대한 불신 확산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미준수 가능성 존재

□ 갈등관리계획

○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현장 의견수렴 계속

○ 민생과 관련된 방통위 정책의 발굴·추진과 함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 노력

○ 장시간 근무 관행, 상사·동료 눈치 보기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사용이나 정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 덕목이나 직무분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정과제, 공직가치 등 교육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체계적 관리 및 독려가 지속적으로 요구

○ 공직사회 보안기강 확립을 통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차단, 방송시설 출입통제·검색 강화

○ 생성형 AI 통한 민감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보안장비 도입,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를 위한 보안업무 체제 구축

○ 정치적 중립성 미준수로 인한 각종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점검 강화, 소극행정 상시 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 활동 실시

○ 北 대남도발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방송시설 보안점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으로 보안 대비태세 구축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Ⅳ-1-①)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국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성과관리 추진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국정과제 6번),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국정과제 27번),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국정과제 59번)

-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정과제 핵심목표 달성

- 최근의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25년 업무계획과 주요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통위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도모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민생밀접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방통위 업무역량 강화

- 정부혁신 우수과제 선정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조직 내·외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독려

○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갈등 리스크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갈등관리 추진

○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연구,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여 결과를 방통위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하는 등 정책의 내실화 도모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5년 업무계획 수립	'25.1월	
	2025년 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25.3월	
	2025년 국정과제 및 입법계획 조정·보완	'25.2월	
	2025년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25.3월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25.2월	
	2025년 정책연구 과제 공모	상반기	
2/4분기	2025년 주요정책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25.6월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5.4월	
	2025년 갈등관리과제 갈등영향분석 실시	'25.3월	
	2025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상반기	
3/4분기	방통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25.7월	
	2025년 정책연구 수시과제 공모	하반기	
4/4분기	2025년 정부업무평가 실시	하반기	
	2025년 갈등관리 실적보고	'25.11월	
	2025년 정부혁신평가 실적보고	'25.11월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25.11월	
	2025년 정부혁신 성과공유 추진	'25.12월	
연중	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 이행점검	분기별	
	방통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분기별	
	2025년 창의역량 교육 실시	수시	
	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수시	
	주요 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 업무계획세부이행계획 , 국정과제, 정부혁신과제 : 분기별 * 주요 갈등관리과제 : 월별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업무계획·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국장 등 고위급 현장방문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주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 사업자, 이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시 수반되는 갈등관리를 위해 방통통신·이용자 보호·법률 전문가들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정책연구과제·학술행사 선정을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 기대효과

○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민생밀접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2-일반재정①)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발기금	73	67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01)		24	24
방송통신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②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49	4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2)		3	3.6
- 행정서비스 창의역량 개발		0.9	0.9
· 직원 창의역량 향상 교육		0.3	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100	100	100	100	방통위가 연초 수립한 국정과제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별 월별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	(점검횟수/4) x100	국정관리시스템 등록 실적 등
혁신과제 이행률(%)	100	100	100	100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 혁신과제 이행실적 측정	(이행과제수/전체과제수)x100	이행실적 점검

2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Ⅳ-1-②)

□ 추진배경 (목적)

○ 기관 내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현안 해결

○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방송·통신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 국가 중요시설(방송국, 송신소)에 대한 방호실태 점검 실시 및 방호력 개선으로 방송시설 통합방위 태세 확립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 대상 업체의 비상 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행정 활성화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기적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방호점검을 통해 방호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국가 중요시설 방호력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집행계획 작성·시행·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활용성 제고)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1차)	'25.1월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5.2월	
	2025년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25.2월	
	동원자원조사 실시, 상반기 비상대비시행태세 확인·점검	'25.2~3월	
2/4분기	상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25.3~6월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25.4~7월	
	2025년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실시	'25.4월	
	2025년도 상반기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조치	'25.4~5월	
	2025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DB 선정	'25.4~5월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25.5~11월	
3/4분기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2차)	'25.7월	
	2025년도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 방안 마련	'25.8월	
	2025년도 을지훈련 실시	'25.8월	
4/4분기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3차)	'25.10~12월	
	하반기 비상대비시행태세 확인·점검	'25.10~11월	
	하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25.10~11월	
	충무집행계획 부록· 및 자체 충무계획 수립	'25.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협의회 개최 등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전시계획(충무계획)의 상·하 연계성 유지 및 실행력 제고, 비상대비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협업 증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1차)	’25.1월
워크숍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25.4월
간담회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2차)	’25.7월
워크숍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25.11월
간담회	2025년도 방통위(산하기관) 데이터협의회 개최(3차)	’25.11월

□ 기대효과

○ 방통위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관련 품질·분석·개방 등 현안 협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과학적 행정 실현

○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이용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국가중요시설 방호력 제고, 을지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비상대비 관리체계 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실적 추진율(%)	-	-	변경	100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정원 대비 우리기관 목표치(건수) : 4건 ※ 목표과제 수 설정산식(행안부): 방통위 정원(215)×0.018 = 3.87(4건) 1)중앙행정기관 : (본청)정원 X 0.018 2)공기업 : (본사)정원 X 0.02 3)지자체 : (본청)정원 X 0.008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지침-	발굴실적(건)/목표 실적(건)×100 ※ 발굴목표 : 4건	‘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결과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	-	99.99	99.99	‘25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단지표 중 ’데이터 오류율‘ 1등급(0.01%) 목표	{1-(오류데이터 건수/진단대상 DB 전체 데이터 건수)} ×100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자체)
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5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 :43개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목표 : 39개	[{(자원조사실시 업체/자원조사 대상업체)×0.5}+{(방호점검 기관수/방호점검 목표 기관수)×0.5}]×100	점검결과 보고서 (자체)

3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Ⅳ-1-③)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방송통신 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 방송통신 규제 현안에 대해 방송통신·경제·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개정	'25.5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반기)	'25.2월	
2/4분기	방송통신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상반기)	'25.4월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정비	'25.4월	
3/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반기)	'25.8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반기)	'25.9월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	'25.9월	
4/4분기	규제혁신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25.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규제혁신과제를 추진하는 소관 과에서 사업자·관계부처 의견수렴 진행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5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2 '23 '24</th><th>'25</th></tr>
<tr><td>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td><td>- - 신규</td><td>90</td><td>① 자체 규제심사위를 운영하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정책수혜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을 위해서는 규제심사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합리적인 규제 정비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100%) 설정

② 규제정비계획 대비 실적 측정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 · 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 혁신과제 선정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최근 3년간('22~'24년) 평균 실적(66.8%)보다 높은 80%를 목표로 설정
<table><tr><th>연도</th><th>규제정비 이행률</th></tr><tr><td>2022</td><td>100%</td></tr><tr><td>2023</td><td>100%</td></tr><tr><td>2024</td><td>0%</td></tr></table>
①,②번의 목표의 측정산식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치를 90%로 설정

※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 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② 기존 규제정비이행률(%) × 0.5
= 100 × 0.5 + 80 × 0.5 = 90(%)</td><td>① + ②

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심사절차 준수 건수 / 총 심사 건수) × 0.5

※ 규제심사 절차 준수 여부 판단기준 :
- 정책입안(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 부처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② 기존 규제정비 이행률(%) × 0.5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 규제정비 과제수) × 0.5

* 이행여부 판단기준:
-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 이하 법령 등은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td><td>-사전검토요청 증빙자료
-규제심사대상여부 확인증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증빙
-규제심사위 개최 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확인증

보도자료 및 개정안 내부자료</td></tr>
</table>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Ⅳ-1-④)

□ 추진배경

○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국정가치 실천 문화 조성 필요

○ 효율성·투명성·신뢰성 등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구성원 간 학습·공유하여 새로운 국정(國政) 가치의 실현·지속을 위한 동력 확보

○ 일·생활·가정의 균형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연가·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생산적 근무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

- 주요 정책 및 국정철학 교육을 통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직무 전문성 교육 강화로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역량향상

- 공직사회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맞춤형 교육을 기획·운영으로 직무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

- 신규 직원에 대한 멘토링 제도, 방송통신 기본 직무교육 등을 통해 조직 성공적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지속 개발

- 미래인재 양성 및 공직 매력도 제고를 위해 청년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로 글로벌 인재의 전략적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개인별 연가·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자유로운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권장연가일수를 15일로 지정하고, 계절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하계·동계휴가 사용을 장려

- 매월 부서장 연가사용 현황·계획을 기관장에 보고하여 부서장의 연가 사용 솔선수범을 촉진,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의 적극적 활용 권장으로 직원의 개인상황을 반영, 출·퇴근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 공공물품 구매 및 조달 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업·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

-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하는 제품(공사,용역,물품) 액수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간 구매하는 제품(물품·용역) 액수의 5%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

- **(장애인생산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구매하는 제품(용역, 물품) 액수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 '24년에는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1.0%)으로 하였으나 '25년부터 법정의무구매비율이 상향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24년 1.0% → '25년 1.1%)로 변경

- 분야별 전자시스템(공공구매종합정보망, 꿈드래 등)을 적극 활용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계획 수립	'25.1월	
2/4분기	'25년도 근무혁신방안 종합계획(공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수립	'25.2분기	
	가족초청행사	'25.2분기	
	독서통신교육	'25.2분기	
3/4분기	AI 역량 교육	'25.3분기	
	독서통신 교육	'25.3분기	
	'25년도 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25.3분기	
4/4분기	가족초청행사	'25.4분기	
	폭력예방교육	'25.4분기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계획 점검	연중	
분기별	시간외근무 실태 조사·분석	연중	
수 시	공공구매 및 구매율 점검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복무제도 등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내부 직원 의견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노사협력 간담회	내부 직원 애로사항 청취, 공직문화 등 논의	'25.5월
노사협력 간담회	내부 직원 애로사항 청취, 공직문화 등 논의	'25.11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교육을 지원하여 정책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연가 및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직원의 근무시간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 국가배려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4	'25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3.06	3.61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2)		0.62	0.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상시학습 활성화율(%)	-	-	-	86	최근 3년 실적 평균*(84.8%)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86%로 설정 * '22년 87.3%, '23년 85.6%, '24년 81.5%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이하 현원	표준인사시스템 통계자료
연가활용 달성도(일)	-	14.9	14.9	15	'24년 전직원 평균연가사용일수(14.9일, '23년 동일) 및 전부처 평균 권장연가일수(14.8일)를 고려하여 보다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연가사용 일수의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표준인사시스템 통계자료
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	80	100	100	분야별 공공조달 구매의 법적 의무 구매 기준을 달성하도록 목표 설정 - (A)중소기업제품 : 50% - (B)여성기업제품 : 5% - (C)장애인생산제품 : 1.1% ※ 공공조달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 구매 기준	분야별 달성률의 평균 [(A)달성률+(B)달성률+(C)달성률)/3]	디브레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꿈드래 사이트 등
직원초청행사 만족도(점)	-	-	92.5	80.0	'24년 신규지표로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75점) 대비 5점 증가한 80.0점으로 목표치 설정	참여 직원 설문조사(5점 척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개최 결과보고 문서 등

5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Ⅳ-1-⑤)

□ 추진배경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 랜섬웨어, SW 공급망 공격 등 최신 주요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 현장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비하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5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25.1월	
	2025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5.3월	
2/4분기	2025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25.4월	
	방통위 적극행정 자체교육	'25.5~6월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 개최	'25.9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25.9~10월	

4/4분기	2025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25.11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25.12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25.12월	
수시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민원 처리	연중	
	복무사항 등 공직기강 점검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25.4월, 8월, 11월
의견수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우수사례 심사	’25.8월

□ 기대효과

○ 대외 위기상황을 고려한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보안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확인 등으로 방송시설 보안수준 강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보호계획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부처주도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 유도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방송통신 행정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3 (45.1)	1.3 (45.1)」
▪행정사무정보화(308)		1.3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보안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5년도 목표> -보안점검 기관수: 32개 -보안점검 목표: 14개 ※ 보암점검 대상 32개 기관의 점검 주기가 기관별로 상이함을 감안하여 25년도 목표치를 14개로 설정 * 32개기관 점검주기 기준 - 매년: 산하기관(2개), 지상파3사(3개) - 매2년: 지상파라디오(2개) - 매3년: 유관기관(1개), EBS(1개), DMB(1개), 지역MBC(16개), 종편(4개), 보도PP(2개)	(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100	점검 결과보고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82.4	82.3	82.8	82.9	'24년 실적대비 0.1% 향상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본인확인기관 : 6개 * SKT, KT, LGU+,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KCB - 위치정보사업자 : 3개 * SKT, KT, LGU+	AL(%)=(T/5)×100 ※ AL : 수준율 T : 기반시설 전체 관리기관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 SKT, KT, LGU+,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KCB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적극행정 활성화율(%)	100	100	75	100	과거 3년치 실적 평균(10.3) 이상을 목표(12명)로 설정 ※ 연도별 실적 - '22년 10명 - '23년 12명 - '24년 9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2명×100	적극행정위원회 실적 자료

성과목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민생과 직결되는 방송·통신정책을 중심으로 홍보·소통을 적극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정책 메시지를 확산

○ 정책·현안 관련 오보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이슈에는 선제적으로 설명을 추진하여 올바른 정책 정보를 제공

□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소통을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양자·다자간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등 추진

- 해외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분석 등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K-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2	3	3	3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100	100	100	100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하는 비율로, 정책의 적극적 확산을 위해 100% 목표치 설정	온라인콘텐츠 게재 건수/보도자료 배포 건수	방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및 보도자료 배포실적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AI 신기술의 급격한 확산,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미디어 사업자 간 경쟁·갈등 심화 등 방송·통신 산업 환경이 다변화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 산업 융합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제고

○ 국가 간 FTA 확대, 글로벌 OTT 서비스의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 방송통신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 체계 강화 필요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큼

□ 갈등요인

○ 신기술 확산, 산업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이 전문화·세분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저하되어 정책 확산에 애로

□ 갈등관리계획

○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수단을 다각화하고, 정책과 관련한 소통 창구를 활성화

○ 한-캐나다 협정을 비롯하여 중국,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공동제작 활성화 및 대상국가 다변화 노력

※ 현재, EU 27개국, EFTA 4개국, 개별 7개국(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등 총 38개 국가와 협정 체결 완료

-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FTA 및 다자간 협상에 공동대응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바, 통일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스포츠, 문화 등 非정치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작 지원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Ⅳ-2-①)

□ 추진배경

○ 언론의 원활한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방송통신정책을 확산

○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언론·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효율적 정책 추진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점홍보 실시)** 민생 관련, 주요 정책 중심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여 소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언론·국민의 관심을 제고

- 중요도·관심도에 따른 기획홍보 추진, 브리핑 실시, 외신보도 지원 등을 통해 정책홍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

○ **(정책소통 강화)** 정책추진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국민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을 알리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형식의 언론 소통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

○ **(신속한 오보대응)** 오보는 신속히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지원

○ **(기관 홍보역량 제고)** 우수 홍보·보도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등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25.2월	
	2025 정책 홍보계획(안) 수립	'25.3월	
2/4분기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25.6월	
3/4분기	정책소통 활동 중간 점검	'25.9월	
4/4분기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25.12월	
	우수 보도자료·홍보사례 시상	'25.12월	
연중	기관장 언론홍보 추진	수시	
	보도자료 배포(영문 보도자료 포함) 및 브리핑 지원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주간 홍보계획 관리		
	설명·반박자료 배포 등 오보 대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효과적·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

□ 기대효과

○ 적극적·선제적 정책홍보 추진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언론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의 방송·통신 권익을 증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정책소통 활성화율(%)	-	신규	100	100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취재 지원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오보대응과 주간홍보계획 사전배포 10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52주)×50%+(오보대응건수/오보모니터링 건수)×50%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및 방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일일브리핑 코너)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79.4	78.8	76.22	79.7	최근 3년 만족도 결과의 평균(78.1)보다 2%(1.6)를 상향하여 목표치로 설정	만족도 조사 결과(대국민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방통위 온라인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2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Ⅳ-2-②)

□ 추진배경

○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SNS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SNS 채널 활성화)**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확산하고 세대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제작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캠페인 추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통신정책을 트렌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력을 제고

○ **(국민참여 콘텐츠 제작 확대)** 국민정책기자단, 정책수혜자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하여 정책 체감도 강화

○ **(위원회 내·외부 협력체계 강화)** 위원회 내 정책 담당 부서 및 사업수행 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내실화와 확산 강화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상반기	2025년도 홍보 계획 수립	'25.3월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지원 대행사 선정	'25.2월	
	국민 정책기자단 모집 및 발대식	'25.3월	
	상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추진	'25.3~6월	
하반기	하반기 주요 정책 기획 캠페인 기획·추진	'25.9~12월	
연중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 운영·활성화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활성화		
	정책기자단 활용한 방송통신정책 콘텐츠 제작		
	대내외 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위원회 내 정책 담당 부서 및 사업수행 기관, 국민정책기자단과의 회의를 통해 위원회 주요정책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정책홍보기획회의를 통한 위원회 주요 홍보 과제 선정 및 방향 설정	매월
	국민정책기자단과 회의를 통해 주요 홍보 과제 및 콘텐츠 제작 방향 공유, 콘텐츠 개선점 등에 대한 피드백 진행	
	사업수행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주요 홍보과제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매월 홍보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정책을 동영상·카드뉴스 등 쉬운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2	'23	'24	'25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건)	200	147	180	190	국민정책기자단 인원, 예산안 등을 고려 전년 목표치에서 5% 상승한 190건 설정	국민 정책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 기획에 참여한 건수	기자단 제출 콘텐츠 및 방통위 SNS 게재 현황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신규	155	111	100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SNS 채널인 유튜브의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활성화 정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목표구독자) 전년 실적대비(33,501명) 15% 증가한 38,526명 설정 - (목표조회수) 과거 추세 및 예산삭감을 감안하여 '24년도 목표 조회수(290만회)에서 30% 감소한 200만회 설정	[(구독자/목표구독자)×60%] + [(조회수/목표조회수)×40%] ※ '25.12.31 기준	유튜브 채널 내 구독자·조회수 현황 자료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	신규	143	100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의 구독자수와 도달률을 기준으로 활성화 정도를 평가지표를 설정 - (목표구독자) 전년 실적대비(12,622명) 20% 증가한 15,146명 설정 - (목표도달수) 전년 실적대비(1,267,084회) 10% 증가한 1,393,792회 설정	[(구독자/목표구독자)×50%]+[(도달수/목표도달수)×50%] ※ '25.12.31 기준	인스타그램 채널 내 구독자·도달수 현황 자료

※ 예산삭감을 고려하여 유튜브 조회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나 인스타그램의 도달률은 전년대비보다 높게 증가율을 잡아 제한된 자원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도모

3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Ⅳ-2-③)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 간 협력 기반 강화)**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주요 정책 현황 공유 및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국제기구 협력 강화)** AIBD 등 방송통신 국제기구의 행사 참가 및 공동행사 개최를 통한 해외 방송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채널 활성화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에 근거한 국가(태국·튀르키예·캐나다 등)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통상 협상 적극 대응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체결의 실효성 제고 및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촉진

-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송콘텐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방송교류를 통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대상국의 시장현황, 규제체계, 공동제작 현황 및 콘텐츠 이용 행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방송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방송통신 분야 통상대응 체계 구축)**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 수렴과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ㅇ 통일의식 제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제고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의 문화, 역사 등 비정치 분야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25.2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 협의	'25.2월~	
	방송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방송사 선정	'25.3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및 선정계획 협의	'25.3월~	
2/4분기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개시	'25.4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조사대상국 선정 및 조사	'25.3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25.5월~	
	한-AIBD 공동워크숍 기본계획안 수립 및 용역계약 추진	25.4~6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공모	'25.6~7월	
3/4분기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25.5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중간 점검	'25.7~9월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심사 및 수상작 선정	'25.7~9월	
	2025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 및 AMS 참석	'25.7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설문조사 실시	'25.7~10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25.9월	
4/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10~12월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정책만족도 조사 시행	'25.11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정리	'25.12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결과보고 해외 미디어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5.12월	
연중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협력 추진	연중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제작사,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방송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하반기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토대 마련,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프로그램 발굴(시상) 등 국제 방송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 확산 실행력 강화

○ 해외 방송시장·규제현황·구매력 등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 및 방송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에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4	'2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21.48	16.26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2.74	2.54
- 방송통신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0.9	0.9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	2.70	2.7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발전기금	0.81	0.81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06	1.17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1.53	1.0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4.34	3.54
- 공동제작 협정 제작지원		5.40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2	'23	'24	'25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공통)(점)	73.8	74.8	76	77	국제 정세 흐름, 협력 추진국의 상황 등 외부요소에 의해 성과 달성 여부의 변동성이 크고, 해외 협력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4년 실적치(76점)보다 1점 상향된 77점을 목표치로 설정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 만족도x0.5]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x0.5]	방송통신 및 공동제작 국제협력 관련기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공통)(점)	86	84.6	86.3	87	최근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4년 실적치(86.3점)보다 0.7점 상향된 87점을 '25년 목표치로 설정	[정책만족도×0.4] + [콘퍼런스 만족도×0.3] + [프로그램 제작지원 만족도 ×0.3]	방송통신 업계 및 학계 등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 수혜기관 설문조사 결과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

< 자체평가 절차 >

소위원회(위원)	⇨	소위원회	⇨	소위원장회의	⇨	전체위원회의
관리과제별 실적보고서 평가		관리과제별 순위 확정		정책만족도 반영 등급 확정		심의·확정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원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을 구성·운영

- 평가지원총괄팀(의안·정책관리팀)은 자체평가 주요계획을 수립·시행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평가보고서 작성방향, 평가기준·방법·일정 등 세부 추진방향 수립

· 평가분야별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전체·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 총괄

· 정부업무평가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평가자와 피 평가부서 간 소통창구 역할

- 평가지원팀(각 국 총괄)은 각 소위별 정책소통 및 평가 실무 지원

· 과제 담당자로부터 평가자료 수합 · 정리, 자료 제출 등 소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 평가관련 제도 개선, 정책설명회 개최 수요제기 등 국별 의견 제출

· 반기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점검 시 국별 추진실적 1차 확인 · 점검

□ 평가(점검)의 시행

○ 상반기 세부과제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예상 과제는 원인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각 소관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 · 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고 Plan-Do-Check-Action 사이클 확인 · 점검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의 종합적 심층진단 병행

< 이행상황 관리 점검 및 평가 체계 >



□ 주요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일정
'25년 1분기	o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o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3월
'25년 2분기	o '25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직원 설명회 개최	5월
'25년 3분기	o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이행계획 점검 및 국조실 제출	7월
	o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정(필요시)	8월
'25년 4분기	o 자체평가위원회 정책현장 방문 및 워크숍 개최(필요시)	10월
	o 성과관리 시행계획 정책만족도 조사	11월
	o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11월
	o '25년 자체평가 실시	12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환류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 과제별 개선 보완사항은 '2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 성과가 미흡하지는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자체평가를 부서성과관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성과급 평가시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유도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과 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 환류 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결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검토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전보·파견 등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보직 전보 및 외부기관 파견 시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체결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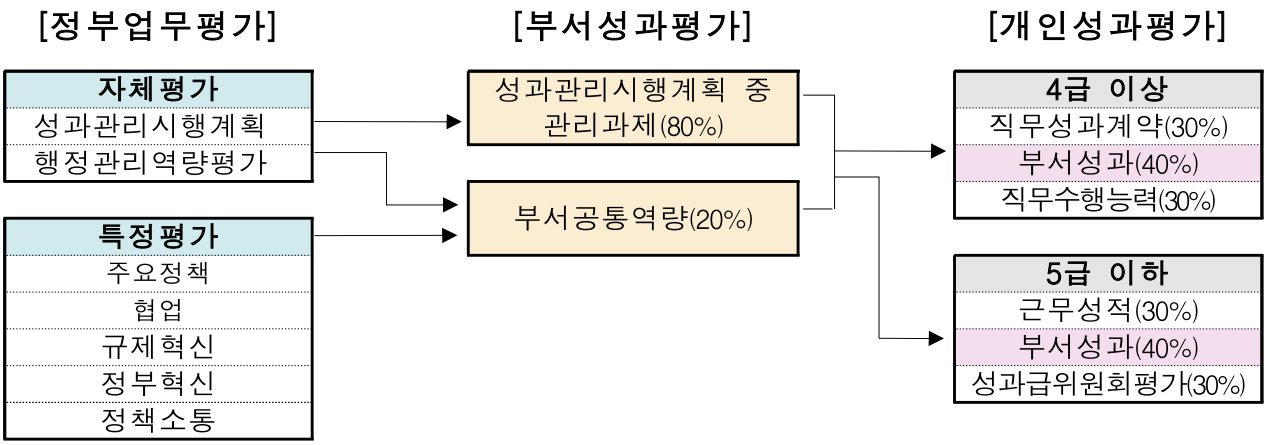
-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o 직무성과계약(30%), **부서성과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3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5급(상당)	o 근무실적평가(30%), **부서성과평가(40%)***, 보수성과심의위원회평가(3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성과관리 체계>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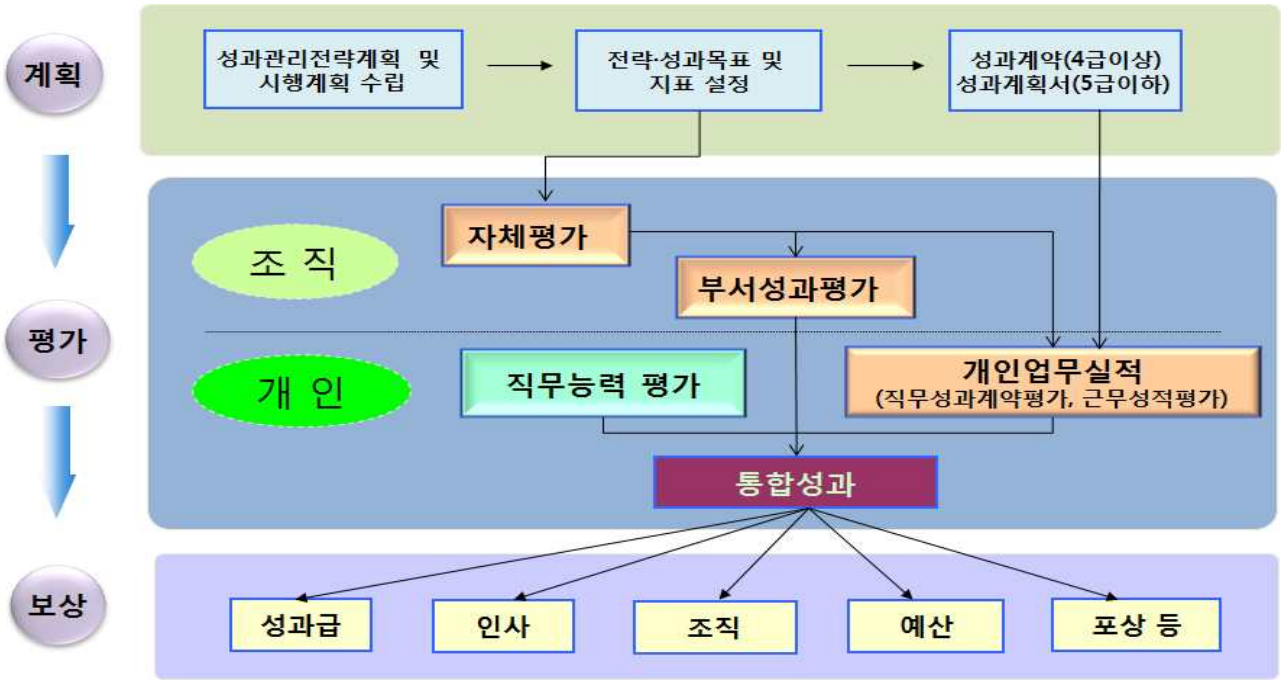
○ ’25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포상시기 : ’25년도 자체평가 실시 후(’26.2월중)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략·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계약(4급이상) 성과계획서(5급이하)
평가
조 직
자체평가
부서성과평가
개 인
직무능력 평가
개인업무실적
(직무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가)
통합성과
보상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
포상 등

[붙 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3	0 (0%)	0 (0%)	1 (33.3%)	2 (66.67%)	3 (100.0%)
성과목표	9	11	0 (0%)	0 (0%)	8 (72.7%)	3 (27.3%)	10 (90.9%)
관리과제	27	48	0 (0%)	0 (0%)	29 (60.4%)	19 (39.6%)	37 (77.1%)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①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12	정량	산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상 제재건수 집계	8	정량	결과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과년도 지상파 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20.8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Ⅰ-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수)×0.5]	96	정량	산출	
Ⅰ-2. 방송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 ① + ② >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0.5 ※ 7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81.0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0.5 ※ '25년 목표 : 51개	100	정량	산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Ⅱ-1.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실적(점) [건수+만족도]	[전년목표 대비 10% 상향 피해상담 건수 기준, (당해 실적 5점 척도 산출점수) x 60%]+ [(상담 만족도 5점 척도 산출점수) x 40%]	3.05	정량	산출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정보판별교육 활성화(점)	((교육수료인원/교육수강인원)×100)×0.7+(교육만족도×0.3)	91.9	정량	결과	
Ⅱ-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10	정량	결과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Ⅲ-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수신기 시각·청각장애인 전체 누적보급률(%)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전체 시각·청각장애인수)×100	50	정량	산출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①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2	82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주요 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률(%)	(이행실적 점검 횟수/3회) x100	100	정량	산출	
	②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율(%)	폐지 또는 개선한 일몰규제 수/전체 일몰규제 수×100	27.77	정량	산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 행사 활동 건수(건)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3	정량	산출	
	② 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 콘텐츠 게재건수/보도자료 배포건수	100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Ⅰ-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0.5]+[(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0.5]	98.9	정량	산출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 종편·보도PP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①+②+③+④> 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보도PP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건수 × 0.5) ② 공익채널 선정 추진율 (공익채널 심사위 운영 × 0.05) + (공익채널 선정 의결 × 0.05) ③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 [(유료방송 (재)허가·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 건수/사전동의 대상 사업자)×0.2] ④ 제도 개선 추진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 0.1)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1)	98.4	정량	산출	
Ⅰ-2. 방송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 ①+②+③ > ① 공영방송 제도개선 추진율(0.4) - (협약제도 도입 추진 ×0.25)+(수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0.25) ② 소유·겸영규제 개선 추진율(0.4) - (소유·겸영규제 관련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개정안 마련×0.25)+(소유·겸영규제 개정 절차 준수율×0.25) ③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추진율(0.2) - (정책연구 실시 × 0.3) + (의견수렴 진행 ×0.3)+(법안 마련× 0.4)]				
	②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7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81.0	정성	결과	-
		②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교육 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점수 - 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점수}×100	7.0	정량	결과	-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점)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를 정량화된 설문을 통해 계량 측정 (7점척도 설문을 백분율로 환산)	88.0	정성	결과	
		② 콘텐츠 마켓 출품 프로그램수(개)	참가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231	정량	산출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재난콘텐츠 제작 달성률(%)	(제작편수/제작 목표편수)×100 - 25년 목표 : 40편	100	정량	결과	
		② 방송재난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율(%)	['25년도 안전점검 시설 수/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 수(104개소)]×100	95	정량	산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Ⅱ-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① 디지털서비스 정책개선 건수(건)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3	정량	결과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① 통신분쟁 해결률 (당해연도, %)	[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수락+신청취하) / 해결건수(조정전합의+조정안수락+신청취하)+미해결건수(조정안불수락+합의가능성 없음)]×100	79.3	정량	산출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①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활성화율(%)	[(플랫폼 오픈 점수)×0.2]+[(위험성 신고 내용 검증 건수/위험성신고건수)×0.4]+ [(정보제공건수/목표 정보제공건수) × 0.4]	8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점수] ×100	19.5	정성	결과	
		②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2	정량	산출	
		③ 디지털윤리교육 만족도(점)	디지털윤리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91.6	정성	결과	
		④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만족도×0.5)+ (맞춤형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91	정성	결과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0.5]×100+[(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 ×0.5]×100	100	정량	결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수행건수/신청건수×0.5]×100+[평가기술 고도화 건수×0.5]×100	99	정량	산출	
Ⅱ-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①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율(%)	< ① + ② > ① 규제 정비추진율(0.5) -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0.1)+(불공정 행위 유형 분석×0.2)+(하위 법령 정비안 마련×0.2) ② 조사 효율화 추진율(0.5) - (규제 동향 분석×0.2)+ (조사관 교육×0.1)+(신 유형 조사추진×0.2)	100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지수(점)	<(①×0.4)+(②×0.3)+(③×0.3)> ①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8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총건수) ×100 ② 유무선 정책제도 개선 건수 : 4건 ③ 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 4건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①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지수(점)	<(①×0.4)+(②×0.3)+(③×0.3)> ① 부가통신시장 금지행위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건수 달성률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건수/목표치)×100%] ②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준수율(개선조치 건수/개선권고 건수)×100%] ③ [(불편광고 측정 건수/불편광고 측정목표치)×100]×0.4+(사업자설명회 개최**)×0.3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개선***)×0.3	85	정량	산출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①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인식도(공통)(점)	리커트 5점 척도(0점에서 100점까지 구간별 25점씩 상향)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1.0	정량	산출	
		②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개선 제고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개최)× 0.5 + (모니터링을 통한 유료방송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분석 건수)× 0.5	100	정량	산출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Ⅲ-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 척도 평균 점수)/7]×100	64.3	정성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편성 분량(시간)	장애인방송 필수지정 방송사업자 전체의 장애인방송 편성분량	760,000	정량	결과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외주제작시장 환경개선 만족도(점)	외주제작 정책만족도 조사 1차·2차 평균 * 5점 척도 평균을 100점 만점 환산	86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전반적 만족도×0.5)	78.0	정성	결과	
		② 방송광고 규제검토 및 개선(건)	이해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건	6	정량	결과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점검횟수/4) x100	100	정량	산출	
		② 혁신과제 이행률(%)	(이행과제수/전체과제수)x100	100	정량	산출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추진율(%)	발굴실적(건)/목표 실적(건)×100 ※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정원대비 우리기관 목표치(건수) : **4건**	100	정량	산출	
		②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1-(오류데이터 건수/진단대상DB 전체 데이터 건수)}×100	99.99	정량	산출	
		③ 비상대비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점검 달성률(%)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방호점검 기관수/방호점검 목표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율(%)	① + ② ① 규제심사절차 준수율(%) × 0.5 = (심사절차 준수 건수 / 총 심사건수) × 0.5 ② 기존 규제정비 이행률(%) × 0.5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 × 0.5	90	정량	산출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상시학습 활성화율(%)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이하 현원	86	정량	산출	
		② 연가활용 달성도(일)	위원회 직원의 연가사용 일수의 평균(연가사용 일수의	1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합/위원회 근무 직원 수)				
		③ 공공구매 법정의무 구매기준 달성률(%)	공공조달 구매 분야별 달성률의 평균 [(중소기업제품구매 달성률+여성기업제품구매 달성률+장애인생산제품 구매 달성률)/3]	100	정량	산출	
		④ 직원초청행사 만족도(점)	참여직원 설문조사 (5점 척도)	80	정량	산출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① 보안점검 달성률(%)	(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100	100	정량	산출	
		②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82.9	정량	산출	
		③ 적극행정 활성화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2명×100	100	정량	산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 정책소통 활성화율(%)	(주간 홍보계획 사전배포 건수/52주)×50%+(오보대응 건수/오보모니터링 건수)×50%	100	정량	산출	
		②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결과(대국민 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79.7	정성	결과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건)	국민 정책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 기획에 참여한 건수	190	정량	산출	
		② 유튜브 채널 활성화율(%)	[(구독자/목표구독자)×60%] +[(조회수/목표 조회수)×40%] ※ '25.12.31 기준	100	정량	결과	
		③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율(%)	[(구독자/목표구독자)×50%]+ [(도달수/목표 도달수)×50%] ※ '25.12.31 기준	100	정량	결과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공통)(점)	[(방송통신 인프라 강화 만족도)×0.5+(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 만족도×0.5)]	77	정성	결과	
		② 남북 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 (공통)(점)	[정책만족도 × 0.4] + [콘퍼런스 만족도×0.3]+[프로그램 제작지원 만족도 × 0.3]	87	정성	결과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승인 등으로 방송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 6-1)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국정 27-2)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 1-3) 방송 규제 체계 개선(업무 2-2)
	②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국정 27-2)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 1-3) 방송 규제 체계 개선(업무 2-2)
2. 방송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 6-1) 공영방송 경영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국정 6-2)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국정 6-3)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 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국정 27-1)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혁신(국정 27-2)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 1-3)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업무 2-1) 방송 규제 체계 개선(업무 2-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국정 59-1) 전 국민 미디어접근권 확대(국정 59-2)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업무 3-3)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국정 27-6)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 1-3)
	④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전 국민 미디어접근권 확대(국정 59-2)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 1-3)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국정 59-3)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국정 59-4)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업무 2-3)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업무 3-1, 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 상 피해구제 지원강화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국정 59-4)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업무 3-1)
	③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이용자 보호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업무 1-1)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국정 59-4)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국정 59-5)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업무2-1)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업무2-3)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업무3-2)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업무3-3)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국정 59-3)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정한 대한민국(국정 59-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국정 64-3)
3.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①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업무 3-2)
	②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업무 3-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업무 3-2)
	③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국정 59-4)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업무 3-1)
	④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업무 3-1)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업무 3-2)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국정27-1)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1-3)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국정59-2)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업무3-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국정6-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국정6-4) 미디어산업 전반의 규제혁신(국정27-2)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디지털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조성 및 전략 수립(국정27-3) 미디어 공공성 정립(업무1-3) 방송 규제 체계 개선(업무2-2)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업무2-3)
	②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미디어산업 전반의 규제혁신(국정27-2) 방송 규제 체계 개선(업무2-2)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⑤ 보안 및 적극행정 강화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